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통일연구원

제1회의 통일대비

남북통합: 경제적 시너지 효과
권구훈(골드만삭스 상무)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신창민(중앙대학교 명예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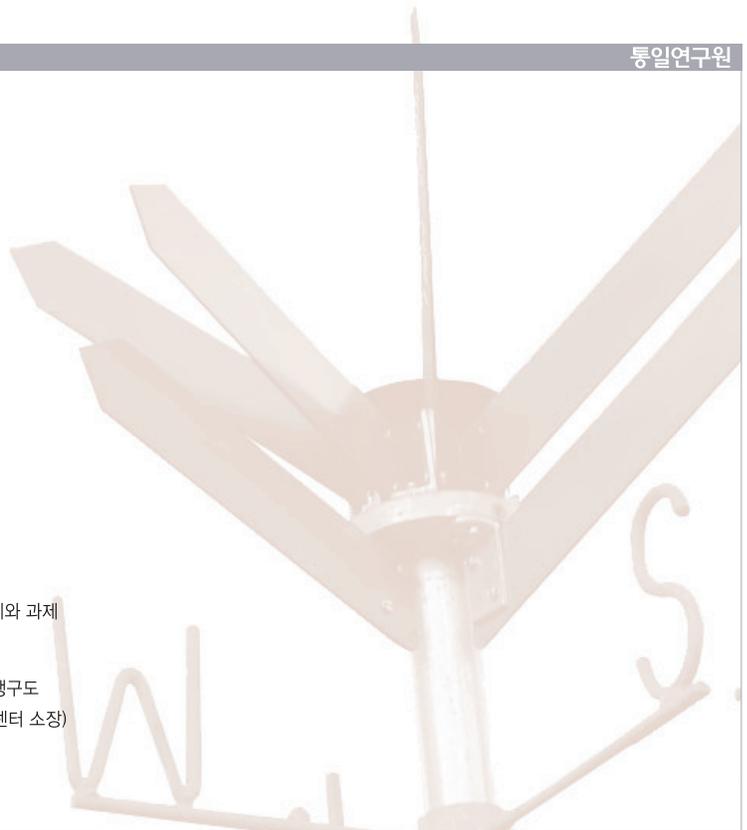
제1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제2회의 통일비전과 통일구상

동북아 협력외교: 한반도 주변정세와 과제
유호열(고려대학교 교수)

3대공동체 통일구상의 특징과 이행구도
박종철(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제2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통일연구원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인 쇄 2010년 12월

발 행 2010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통일연구원장

편 집 인 기획조정실

등 록 제2-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팩시밀리) 901-2541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늘품플러스 (T. 070-7090-1177)

인 쇄 처 (주)예원기획 (T. 02-745-8090)

ISBN 978-89-8479-560-0 93340

가 격 5,500원

© 통일연구원, 2010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매장: 734-6818 ·사무실: 394-0337

본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13:00 ~ 13:30 등 록

13:30 ~ 13:40 개회식

개회사 서재진 통일연구원
축 사 김성환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제 1 회의 통일대비

사회 :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

13:40 ~ 15:40 발 표 1 남북통합: 경제적 시너지 효과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

발 표 2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토 론 배종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최수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5:40 ~ 16:00 휴 식



개회사

오늘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개최하는 광복절 경축사 관련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큰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축사를 기쁘게 맡아주신 김성환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님, 사회를 맡아주신 김구섭 한국국방연구원장님과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발표자와 토론자로 참석해주신 전문가, 학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학술회의 후원을 맡아주신 동아일보사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분단 65년, 6.25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해이며,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분단의 원인이었던 냉전질서는 해체되었지만, 남북의 분단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북정책이 분단의 안정적 관리, 평화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결적 자세는 조금도 변치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정부와 주변국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선군정치, 세습정치, 폐쇄적인 생존전략만을 고수하며 부족한 국가 재원에도 불구하고 핵개발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분단 이후 2세대가 지났고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지난 시점의 21세기 세계질서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천명하신 바와 같이 이제는 분단의 유지관리정책에서 적극적인 통일추구정책으로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룰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과 열기는 매우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통일비용에 가려진 통일편익에 대한 이해부족은 통일이 가져올 엄청난 가치와 혜택을 바라볼 수 있는 해안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통일 독일이 지난 20년간 거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등 전 부문에서의 엄청난 국력 신장을 살펴보면, 통일비용을 초과한 통일이득을 동서독 주민들이 고루 향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일은 우리에게 21세기 국가발전을 위한 미래산업입니다. 통일을 통해 우리는 분단의 벽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던 사고의 경직성과 경제적 영역의 한계를 넘어서, 동북아와 유라시아 대륙을 잇는 미래 통일한국의 위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래지향적 통일비전을 남북한이 함께 공유할 수 있을 때, 진정한 남북한 상생·공영의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참석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우리가 21세기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 실현해내어야 할 통일에 대한 대비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기존의 담론적 통일논의에서 벗어나, 통일이 주는 실질적 경제적 시너지 효과와 통일 편익을 살펴보고 통일의 비전을 구상하는 논의의 장이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이 자리의 의미 있는 토론들이 미래 통일 한국의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 나아가 우리 모두의 통일에 대한 소망이 고양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끝으로 오늘 왕림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학술회의 개최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 9월 1일

통일연구원 원장 



축 사

이제 처서가 지나서 여름의 끝자락인데 무더위는 여전합니다. 9월이 시작하는 첫날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주신 통일연구원 서재진 원장님 그리고 사회, 발제 및 토론을 맡아주신 사회각계의 최고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사회의 통일준비 논의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오늘 다룰 두 가지 주제는 철저히 준비하고 또 대비해 나가야할 핵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월 독일의 쾰러 대통령이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회담을 마치면서 쾰러 대통령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늘 그 말씀을 생각하곤 합니다. “통일에 대한 기대를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독일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올 수 있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이 제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언젠가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특히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재 지향하는 것은 남북 간의 합의에 의해서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 간의 포괄적인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나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서 평화, 경제, 민족공동체라는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을 밝히셨습니다. 평화와 경제공동체는 단계적 선후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호 중첩적으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천안함 피격사건을 통해 보듯이 우리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학술회의의 주제가 말해주고 있듯이 이제는 분단관리를 넘어서서 미래를 대비하는 통일을 준비해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생각해볼 때 통일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

가을 통일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통일세를 비롯해서 현실적으로 통일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공론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바람직한 통일 미래와 비용조달의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는 결코 북한의 특정한 상황을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며,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흡수통일 혹은 북한의 급변사태 논의와 맥락을 전혀 달리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사회 일부에서 진보 세력은 통일을 원하고 보수세력은 분단 상태의 공존을 원한다는 식의 생각이 있지만 저는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우리사회는 진보와 보수의 구별이 없이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위해서 서로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고 서로 도와서 반드시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밝히신 광복절 경축사는 우리사회 통일논의를 국민적 공론화의 장에 내어놓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전문가들의 몫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회의가 우리의 대처방향을 모색하는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2010년 9월 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수석 김 성 환

목 차

개회사

축 사

제 1 회의 통일대비

남북통합: 경제적 시너지 효과 3

권구훈(골드만삭스 상무)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21

신창민(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제1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35

제 2 회의 통일비전과 통일구상

동북아 협력외교: 한반도 주변정세와 과제 49

유호열(고려대학교 교수)

3대공동체 통일구상의 특징과 이행구도 63

박종철(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제2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79

• 최근 발간자료 안내99

제1회의: 통일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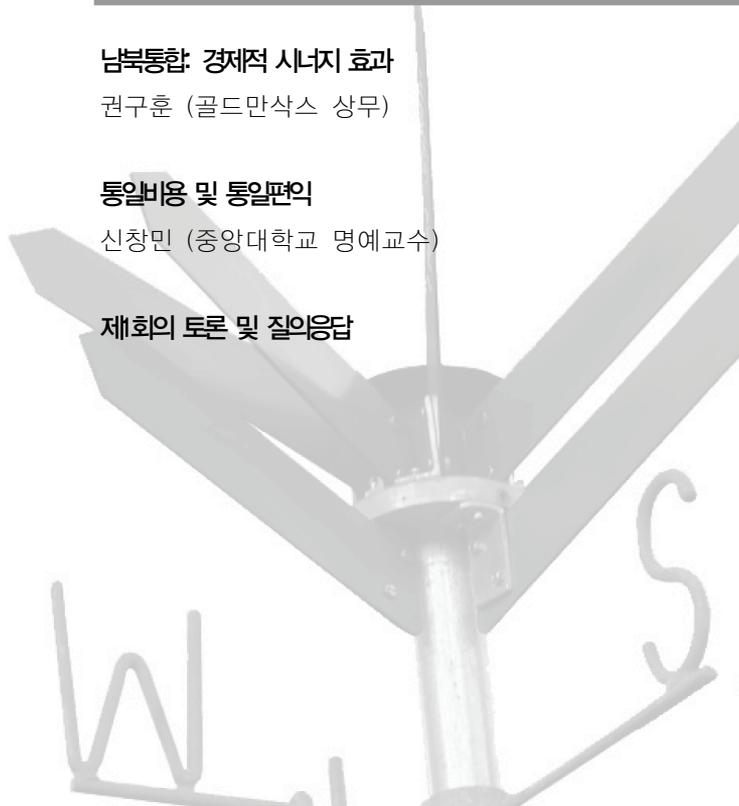
남북통합: 경제적 시너지 효과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제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남북통합: 경제적 시너지 효과

권구훈 (골드만삭스 상무)



:: Summary

- 북한 리스크—재검토 필요시점
 - 북한 리스크에는 하방과 상방의 양면이 있다.
 - 북한 경제는 외부의 원조나 시장경제 개혁 없이는 지속 불가능하다.
 - 북한경제의 잠재력은 상당하며 남한과의 경제적 시너지와 합치면 비교적 빠르게 분출될 수 있다.
 - 통합비용은 적절한 정책에 의해 감당이 가능한 수준으로 조절될 수 있다.

- 남북한 경제적 시너지 효과
 - 인적자원과 인구구조: 남북한을 합치면 8천만에 육박하며 2030년까지는 인구 증가
 - 북한의 지하자원(GDP의 100배 이상 추정)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
 - 이행기 경제의 생산성 증가와 실질 환율 절상효과(달러소득 15년간 평균 10배 성장)

- 통일세에 대한 시사점
 - 남북한 경제통합 시의 장기적 편익은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 통일비용은 매년 700억까지 소요될 수 있다고 하지만 통합 이후 10년간 누적 편익은 1조 달러 이상이 가능하다고 추정된다. 경제통합에서의 문제점은 통합 순 편익이 적다는 것이 아니라, 통합 초기지출이 상당한 반면 편익은 추후 중장기적으로 향유할 수 있다는 데 있다.
 - 지원금위주 소득격차해소를 꾀한 독일식의 통일은 한국의 경우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한반도의 경우 통일 “비용”은 필요액을 계산하는 방식보다는 부담 가능 액수를 먼저 결정하고 적절한 정책의 뒷받침으로 통합을 실행할 수밖에 없다.
 -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는 투자성 비용과 복지 보조금을 구별하고 소요재원도 명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다. 세금으로 조달하는 것은 복지 보조로 한정하고 투자는 차입으로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통일과정의 시작시기와 그 형태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우발적 성격을 띠므로, 현 상황에서 통일세에 대한 논의는 시의 적절하지만, 당장 입안하

고 징수하는 것보다는, 부담 가능 액수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도출하고 필요시 빠르게 증세할 수 있도록 세금부담능력을 유지 또는 증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점에서 재정준칙을 정할 때에 조세 부담률 상한선을 설정하여 통일세 부과의 여력을 보존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다.

- 차입을 통한 통일재원 확보를 위해 우방국이나 민간 또는 공공 국제금융 기관으로부터 Credit line이나 신용 공여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A United Korea¹

I . North Korea: Risks and Opportunities

Investors have long considered North Korea to be a key risk factor when investing in South Korea. The risks relating to North Korea range from the potential for war to huge unification costs. Hence, tensions in the Korean peninsula or signs of unrest in North Korea have typically led to market sell-offs, although this has been less evident recently.

In this paper, we take a fresh look at the risks relating to North Korea, given the prospect of a succession of power in North Korea and the changing economic landscape in the region. The health of current leader Kim Jong-il, in power since 1994, is widely believed to be poor, prompting press speculation that a transition may already be in progress. More fundamentally, North Korea's economy is increasingly lagging behind its former planned-economy peers-not to mention South Korea; living standards in China and Russia, and more recently in Vietnam and Mongolia, have improved rapidly along with market reforms. These developments, in our view, could eventually spark powerful political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which, together with the recent political changes in the U.S. and Japan, could transform the nature and magnitude of North Korea risks.

We assume a peaceful and gradual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n our analysis. Economic integration could take various shapes or forms-from instant unification to a gradual integration-with diametrically different implications for the economy and markets. Experience from Germany's unification suggests that the choice of

¹ Gooho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Part 1)" *Global Economics Paper*, No. 188, Goldman Sachs, (September, 2009).

integration modality may be dictated by the process itself rather than left to the discretion of policymakers. Nonetheless, we believe that our assumption of a peaceful and gradual integration is a reasonable starting point for analysis, given the policy stance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the apparent lack of alternatives for the North Korean leadership other than economic reform and cooperation with neighboring countries.

One of the most striking findings of our study is the potential size of a united Korea in the long term. We project that a united Korea could overtake France, Germany, and possibly Japan in 30-40 years in terms of GDP in USD terms, should the growth potential of North Korea be realized. This projection would put the size of a united Korea in 2050 firmly on a par with, or in excess of, that of most G-7 countries, except for the U.S. We also believe that the cost of the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ould be reduced to an affordable level, if backed by appropriate policies. This would hold even under the unlikely scenario of a sudden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economy.

II. North Korea's Economy: Implications for a United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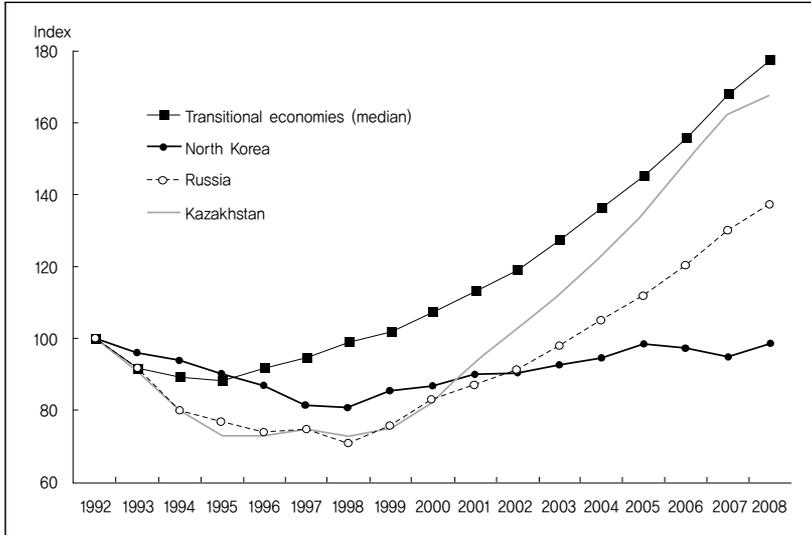
The North Korean economy is at a crossroads. The economy has already suffered from output contraction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former Soviet Union. Output in North Korea fell by 20% from 1992 to the trough in 1998, which was almost as severe as in the transition economies that undertook bold economic reforms (see Exhibit 1). Its output has started to recover since 1998, but the recovery momentum has weakened recently, limiting its per capita income in 2008 at a level 23% lower than in 1990 and to 5.5% of South Korea's. The stagnation in recent years, together with the strong performance of other former planned economies that embraced market reforms, has left North Korea far behind its former

socialist peers, including Mongolia and China.

<Exhibit 1> North Korea's real GDP is still lower than its 1992 level

Output contraction and recovery in formerly planned economies

(real GDP, 1992=100)



Source: Bank of Korea, IMF, GS Global ECS Research.

The planned economy system in North Korea appears to be on the verge of collapse. The unofficial USD exchange rate has surged after a brief period of stability following the 2002 devaluation, reaching about 30 times the official rate in early 200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Official wages, which seem to account for less than 10% of incomes for many, do not carry much weight either given severely repressed inflation in consumer goods. The military establishment is probably the only sector still benefiting from the planned system; it absorbs at least 20%-30% of GDP compared with around 3% of GDP in South Korea (U.S. State Department).

Closer economic ties with South Korea. South Korea is already North Korea's largest export market, replacing China for the first time in 2007. The fact that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 (GIC) in North Korea,

which accounts for about half of inter-Korean trade, continued to operate even amid escalating tensions early this year, testifies to the importance of intra-Korean economic cooperation to both parties. Ongoing UN sanctions are likely to help maintain or bolster intra-Korean economic cooperation, given that the sanctions are not applied to most intra-Korean trade.

III. North Korea's Long-term Growth Potential

Assessing the growth potential of North Korea is a huge challenge. Output and input data are sketchy and difficult to verify. More importantly, the timing and pace at which North Korea will realize its growth potential is likely to hinge on when and whether it embarks on meaningful economic reforms, and the extent of economic integ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both of which are difficult to predict as of now.

That said, we believe that North Korea has strong untapped potential, including 1) an abundant and competitive labor force; 2) ample room for synergies between South Korean capital and technology, and North Korean natural resources and labor; and 3) the potentially large gains from productivity and currency appreciation typical in transition economies.

Abundant and competitive labor force

An abundant and competitive labor force provides a favorable economic backdrop that could trigger a growth spurt, once economic reforms are undertaken. Per capita income stood at around \$1,100(USD) in 2008 at market prices (Bank of Korea estimates) or around \$1,700-2,248(USD) in purchasing power parity (PPP) value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The per capita income at market prices is similar to that of Vietnam and India, and about one-third of China's, all of which benefit from competitive wages and a large domestic demand pool. Living standards could be much lower than implied by per capita GDP, given the large military sector, repressed inflation and shortage of consumer goods. In

addition, more than a third of the population (37%) lives in rural areas, as was the case in South Korea in the late 1970s, providing an ample pool for the industrial workforce.

Strong synergi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North Korea is rich in minerals, unlike South Korea. It has large potential deposits of minerals, including magnesite, coal, uranium and iron ore, valued at around 140 times North Korea's 2008 GDP at current market prices. We estimate its implied net present value (NPV) at around 18 times GDP, assuming a reserve life of 40 years, a discount rate of 18% and wage costs of 15% of sales. In contrast, South Korea has virtually no mineral resources: it imports 97% of the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that Korea uses. Most of the six strategic minerals for South Korea (bituminous coal, uranium, iron, copper, steel and nickel) are abundant in North Korea. The following section examines the implications of these large mineral resources for North Korea's long-term growth potential.

North Korea also has favorable demographics and a well-educated labor force.

We estimate that, in all, the labor force in North Korea could increase by as much as 1.4% per year over a decade under an integration scenario. First, its demographics are relatively young and the population is growing roughly twice as fast as in South Korea. Second, with closer inter-Korean integration, the labor force could increase substantially given the current large military population (nearly 1.3 million or 16% of males between the ages of 15 and 64). As for the quality of human capital, pre-college education is compulsory (up to the age of 16) and is provided by the state.

Productivity gains and currency appreciation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economies suggests that the North Korean economy could benefit substantially from productivity gains and curr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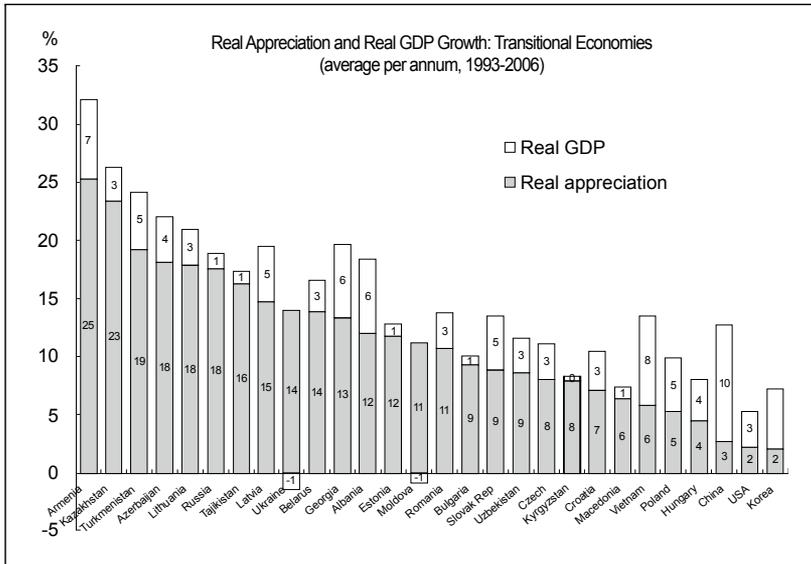
appreciation once economic reforms take hold. The output of the Eastern European and the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transition economies grew 6.2% per annum from trough levels, following large initial output losses following the collapse of the planned economy. Asian transition economies performed considerably better, with average annual growth of 8.4% over 1992-2008, and without much of the initial output contraction. Productivity growth, not explained by investment and employment growth, accounted for nearly 40% of total growth over 1996-2006 in transition economies (IMF), indicating better allocation of resources and a more efficient use of existing resources during transition. To the extent that North Korea has already experienced output shocks following the dismantling of the Soviet Union, its growth performance under market economy reforms could resemble that of China, Vietnam and Mongolia, rather than the Eastern European and CIS countries. This puts North Korea's growth potential conservatively at around 7%-8% per annum, should North Korea pursue economic reforms and economic integration with South Korea.

The significant room for productivity gains is supported by our Growth Environment Scores (GES). Our analysis of GES for transition economies shows that the combination of high human capital and yet poor macro and political infrastructure elevates the growth potential for transition economies. In addition, we find that even allowing for improvements in the GES scores as transition occurs, transition economies seem to manage a reasonably lengthy spurt of additional growth over and above what their growth conditions alone would predict in our models. In this context, North Korea's very low indicative GES score, together with a very high GES for South Korea, points to a large upside potential as growth gains from improving GES tends to be higher for countries with lower incomes and lower GES.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economies also suggests that the purchasing power of North Koreans, as measured by USD GDP, could

grow much faster than real GDP. GDP in USD terms in transition economies increased, on average, **tenfold over 15 years** (see Exhibit 2), with 80% of the growth coming from real exchange rate appreciation. The appreciation was particularly rapid for resource-rich countries: Kazakhstan, Azerbaijan, Russia and Mongolia took only 3-4 years to double their USD GDP. This largely reflects the fact that non-tradable goods prices in planned economies used to be heavily discounted as part of social policy, although the improvement in productivity in the tradable sector has also played a role in the real appreciation.

<Exhibit 2> Currencies in most transition economies strengthened more rapidly than output growth



Source: IMF, GS Global ECS Research.

IV. A United Korea—The Potential Size of the Econo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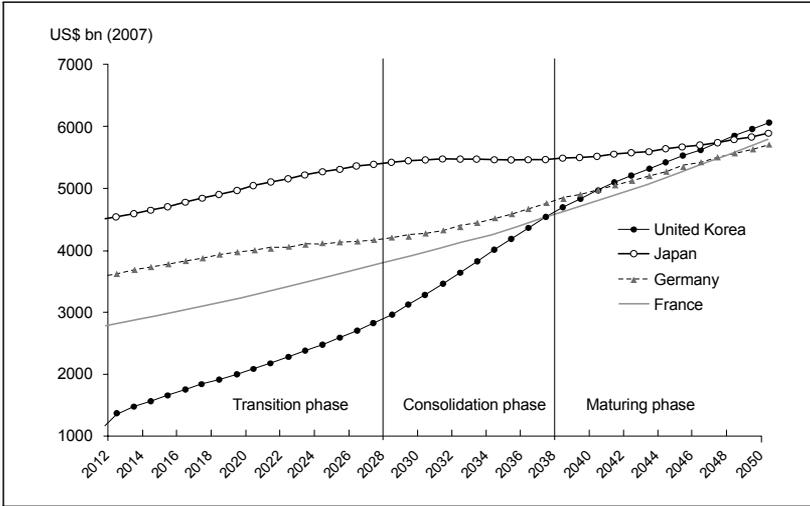
Long-term projection for a united Korean economy

We divide the integration process into three phases: the first as a transition period of 15 years (2013-2027), once the integration process has commenced, the second as a consolidation phase of 10 years (2028-2037), when growth in North Korea is likely to slow, and the third as a maturing phase (2038-2050), when the growth rates for the two should converge. It should be noted that the projection is highly indicative, given the lack of reliable economic data on North Korea, and the sensitivity of the outcomes to the modality and pace of inter-Korean integration.

The following summarizes our key assumptions and main findings:

- Our projection assumes that North Korea's real GDP could grow at 7% on average during the first phase, towards the lower end of Asian transition economies' performance, before slowing gradually thereafter to 2% by 2050.
- We also assume that North Korea's currency appreciates at the average pace of other transition economies, that is, 11% per annum over 15 years.
- For South Korea, we assume a 0.3% increase in the trend growth, supported by higher investment and economies of scale during integration.
- Under these assumptions, the GDP of a united Korea in USD terms could exceed those of France, Germany and Japan in 30-40 years (see Exhibit 3). The baseline long-term growth rates for South Korea and other countries used for comparison are from "The Expanding Middle: The Exploding World Middle Class and Falling Global Inequality," Global Economics Paper No. 170, July 7, 2008.

<Exhibit 3> The GDP (in USD terms) of a united Korea could exceed that of France, Japan and Germany in 30-40 years.



Source: GS Global ECS Research.

Growth potential of the mineral sector

In order to check the validity of our baseline projections, we estimate growth potentials for North Korea’s mineral sector. The conceptual framework is to convert the mineral wealth to financial wealth and estimate three sources of income: the converted financial assets, their investment returns, and wage income from mineral extraction. This approach helps us overcome the inherent difficulties with a direct estimation of North Korea’s growth potential we highlighted earlier— notably the lack of basic data and high sensitivity of our projections to the timing and evolution of reforms and integration.

The estimation results support our baseline growth projections. Below is a summary of our key assumptions and main findings:

- We take the net present value (NPV) of the known mineral wealth of North Korea, equivalent to about 140 times 2008 GDP.

- We convert the mineral wealth to financial assets equivalent to its NPV. This effectively means that North Korea sells the mineral wealth to strategic investors at the NPV price and invests the proceeds in long-term bonds.
- We assume 3% inflation-adjusted annual returns from the bonds through to 2050. We also assume that North Korea earns 15% of mined minerals as wages paid by strategic investors.
- We assume that the non-mineral sector will grow at 5% per annum and that part of the financial assets, together with 3% coupons, are consumed each year, with the balance used up by 2050.
- We estimate North Korea's income at 90% of our benchmark GDP projection in 2050, should the assets be evenly used up, and at 96% if they are consumed incrementally at a constant pac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our benchmark GDP projections are within a reasonable range.

V. Integration Costs and Policy Options

Cost estimates for inter-Korean integration vary widely from 2% to 25% of GDP per annum, depending on the speed of integration and policy assumptions. The most expensive option for South Korea would be the German-style of unification, where fiscal transfers were 3.6%-4.6% of GDP a year over 1991-1999. This option would be prohibitively expensive in the case of Korea, given the relatively large difference in incomes (North Korea's per capita income is 6% of South Korea's as opposed to 33% in the German case) and small population gap (North at 48% of South Korea's population versus 27% in the German cas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see Exhibit 4). The least expensive option would be a China/Hong

Kong-style integration, which allows two economic and political systems to coexist in a country with limited inter-Korean migration.

<Exhibit 4> Selected indicators of North and South Korea

	1994			2008			1989		
	North	South	N/S	North	South	N/S	East	West	E/W
Population (million)	23.0	44.5	57.7%	23.3	48.5	48.5%	16.7	61.4	27.2%
Per capital income (US\$)	923	10076	9.2%	1064	19231	5.5%	12700	38500	33.0%
Gross National Income (US\$bn)	21.2	448.4	4.7%	24.9	928.7	2.7%	212	2364	9.0%
External trade (% of GNI)	9.9	52.5	18.9%	15.4	92.3	16.6%	50	80.9	61.8%
Exports (\$ bn)	0.9	96	0.9%	1.1	422	0.3	n.a.	n.a.	n.a.
Exchange rate against USD	2.16	802	0.3%	130	1100	11.8%	n.a.	n.a.	n.a.
Government budget (US\$ bn)	n.a.	88.3	n.a.	3.5	212.6	1.6%	46.5	78.7	59.1%

Source: Bank of Korea, IMF, OECD.

A decade of inter-Korean dialogue suggests that gradual integration similar to the pattern followed in China-Hong Kong, rather than an instant German-style unification, is the most likely scenario. After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over the past decade, the two sides have recognized the commonality between South Korea's proposals for a confederation and the North's proposal for a low-level federation, which in turn has led to an agreement to pursue national unification along these lines. This has, in our view, laid the foundations for a peaceful and gradual integration of the two sides.

The political backdrop in the region is also supportive of peaceful and gradual integration, in our view. A strong, united stance of neighboring countries on the nuclear issue is likely to lead to a lasting and comprehensive solution of North Korea risks. A recent change in the political leadership in Japan could support a negotiated solution by providing the prospects of improved Japan-North Korea relation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assistance.

We believe that the integration costs of South and North Korea could be reduced to an affordable level, if backed by appropriate policies. Ou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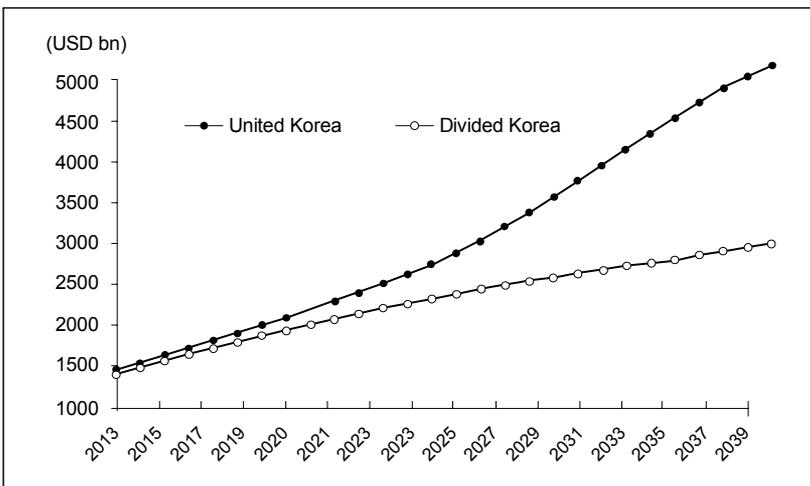
projections above show that North Korea's per capita income could reach half that of South Korea about 20 years after the onset of integration. The maintenance of a flexible exchange regime in North Korea would help achieve this without inducing inflation-driven appreciation, as would typically be the case under an exchange rate peg. We estimate that output growth and currency appreciation under the flexible rate regime, together with annual transfers of 1% of GDP from the South, could shorten the time needed to reach half the income level of South Korea to 13 years. Other important economic policies in North Korea would include: a monetary policy that promotes price stability, fiscal policy focusing on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a social safety net, and structural reforms to help free up resources for lasting growth and foster sound and efficient financial intermediation. Given the importance of the mining sector for investment and job growth in North Korea, the introduction of transparent and sustainable investment schemes for mineral resources would be one of most critical factors for success.

VI. Implications for the Unification Tax

- Long-term benefits of a united Korea are likely to be compelling, with our rough estimation of cumulative benefits to exceed \$1,000bn over 10 years after integration compared with typically quoted unification “costs” of as much as \$70bn per year (Exhibit 5). Challenges are however that benefits are to be realized in the long term while spending tends to be front-loaded.
- German-style unification, centered on income equalization subsidy policy, is out of the question in the case of Korea, both financially and politically. Unification “costs” in Korea would need to be assessed based on affordability rather than “needs.”

- On unification “costs,” distinctions need be made between investment spending and welfare subsidies, given different nature of the spending. Their funding could come from different sources in principle, with the former by bonds and the latter by taxes.
- It is timely to discuss the unification tax. However, given the contingency nature of unification events, the policy focus would need to be made for building political consensus on affordability and preserving/improving tax potentials, rather than designing and collecting the unification tax right now. In this regard, an upcoming discussion on fiscal rules could include a taxation cap in percent of GDP, which could keep room for unification taxation when and if needed.
- As regards unification bonds, efforts could be made to secure contingency credit lines and funding arrangements from public and private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bilateral sources.

<Exhibit 5> USD GDP of a united Korea and a divided Korea



Source: GS Global ECS Research.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신창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 Summary

- 통일비용 관련하여 잘못 인식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부작용의 한 예: 통일세 반대 59%)
- **통일비용 우리가 감당할 수 있고, 빠를수록 상대적 부담 적어진다.**
- 전제조건: 통일 후 10년간 남북측 지역 경제적으로는 분리 관리
 - 통일 후 10년간 군비는 자위 수준으로만(GDP대비 1%정도)
 - 과거 독일 통일 시와 유사한 실책 범하지 말아야(⇒부동산 원 소유주에게 현금보상 등)
 -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크다는 계산 결과
(⇒경제 측면만으로도 통일이 분단 현상 유지보다 유리)
- 통일 후:
 - 북한주민, 10년 내에 “지옥에서 천당으로”에 비유될 정도의 생활로 향상
 - 남측주민, Buy Korean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10년 동안 매년 **11.25%의 획기적 경제성장**
- 남북 간의 큰 흐름: 대결구도, 냉전구도, 현상유지구도로부터 탈피하여 적극적 자세로 분단극복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
 - 즉, 지키는 구도에서 이기는 구도로(방법: R이론)
 -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북측주민의 민심을 사는 일**
(바로 이것이 종국적으로 통일을 가져다 줄 것이다.)
- 통일세 관련
 - 통일관련 소요자금 조달은 세금, 국채를 막론하고 지출 당시에 집행해야 한다. (⇒사전 조달·비축은 낭비)
- 바람직한 규모의 자금 국내 직접 조달 시 형태와 규모:
 - (바람직한 정책) **통일 전: 통일세(가칭, 남북경협기금) GDP 대비 0.25%, 통일국채 0.75%**
 - 통일 후 10년간: 통일세(가칭, 지역발전기금) GDP 대비 1%, 통일국채 3%**

I. 개요

거시경제학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 실증분석을 통하여,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통일편익을 추산, 비교, 분석하고 그 기저의 진실을 드러냄으로써, 통일비용과 통일에 대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긴요한 과제이다. 우리 모두가 올바른 사실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판단을 함으로써, 올바른 방향으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또한 앞당겨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논문을 썼다.

이제까지 통일비용에 관하여, 많은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일반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들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 통일비용의 크기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천문학적인 숫자일 뿐이다. 통일비용 때문에 우리는 통일이 되어도 큰일이다.
- 우리는 막대한 통일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으므로, 우리의 능력을 키워가며 때를 기다려야지 통일을 서둘러서는 안 된다.
- 북한이 무너지면 우리가 함께 망하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북한이 급속히 붕괴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
- 서로 전쟁만 없다면 남북한은 따로따로 살면 될 것이지, 구태여 그 어렵고 복잡한 통일과정을 거치고 그 많은 희생과 비용을 들여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 우리도 살기 어려운데 왜 자꾸 북한에 퍼주는가? 그렇게 해 보아야 김정일 핵무기 만드는데 돈 대 주는 꼴 밖에 더 되는가? 북한이 갑자기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보험에 드는 수준 이상의 협조는 절대로 할 필요가 없다.

위의 모든 주장이나 생각들은 얼핏 듣기에는 모두 일리가 있는 듯하지만, 실은 진실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동안 우리 모두에게 철저

하게 스며 있는 냉전적 사고방식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데 따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통일편익의 구체적 계산결과에 근거하여 위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모두 바로잡고 진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를 우리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데서 출발하여 통일을 성공적으로 성취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통일문제에 관하여 사분오열되어 있는 국민의식을 가지고는 통일이 불가능하므로, 통일비용과 통일편익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방향으로의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데 오늘 우리들의 이 논의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해 나가게 될 것을 기대한다.

II. 계산 방법과 내용

통일비용의 최소화를 염두에 두고, 실현 가능한 합리적인 정책 설정 위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필요한 조건들을 전제로 하여 통일비용을 추산한다.

주요한 몇 가지 전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 통일 후 남북 지역 간 소득조정기간이 끝날 때 까지는 남북 측 지역을 경제분야에 한하여 분리 관리한다.
- 통일 후 군사비 지출을 GDP 대비 1% 수준에 머물러도 무방하도록 주변 강대국들과 우호적 국제관계 구도를 구축한다.
- 북측에 소요되는 실질자본을 축적하는 기간 동안, 국제적인 협조 양해 아래, 북측지역에 소요되는 실물 자본재는 모두 남측으로부터 조달하는 “Buy Korean” 정책을 채택 시행한다.
- 북측지역 토지 국유화 형태는 계속 유지하고, 남측국민이 분단 전에 보유 했던 모든 토지 등 부동산 소유권은 실물 반환을 하지 않고 현금보상을 한다.

통일시기는 2015년부터 5년 단위로 하여 2030년까지를 가상하여 추산하고 비교한다. 통일 후 남북 소득 조정기간은 10년으로 하여 계산해보고, 9년과 8년의 경우도 추가로 계산하여 부담률 변화를 비교분석해 보면서, 어느 기간이 남북 간의 소득조정기간으로서 적당한가를 구분해 본다.

남측 입장에서 볼 때,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통일편익이란 통일로 인하여 얻게 되는 모든 형태의 이득(Gains)의 총 누적 합(總累積合)으로서, 시기별로 나누어 보면,

- (1) 통일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성격을 가진 분단비용이 더 이상 지출되지 않게 되는 이득
- (2) 통일비용 투입과 함께 북측의 경제건설 과정에서 얻게 되는 남측의 경제적 이득
- (3) 남북한 지역 분리 관리의 시기 이후, 장구한 세월 속에 나타나게 될 소득의 증대를 중심으로 하는 편익의 증대 등

III. 이 논문 추산으로 나타난 결과의 의미 분석

통일비용 그리고 분단비용 내지 통일편익을 추산한 결과 및 분석이 보여주는 것을 요약해 보면,

- 첫 째, 우리의 경제력으로 통일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
- 둘 째, 통일과정에서의 부담보다는 추후에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따라서 통일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제2도약의 경제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하겠다.
- 셋 째, 통일의 시기는 빠를수록 유리하다.
- 넷 째, 분단비용은 통일비용보다 크다.
- 다섯째, 분단비용 해소에 따르는 이득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의 통일편익의 크기는 물론, 통일비용보다 훨씬 더 크다.

여섯째, 경제실리적인 면에서만 보더라도, 통일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 보다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낫다.

일곱째, 북측 동포들은 남측의 경제력이 통일을 감당해 낼 수 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어떠한 비상사태에 직면하더라도 남측의 경제력에 신뢰를 가지고, 불안한 생각을 떨쳐버리고 침착하게 대처해 주기를 바란다. 더욱이 중국이나 일본으로의 탈출이란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통일비용과 통일편익 비교로 나타나는 결과 가운데 중요한 부분은, 통일 후 10년 동안 북측지역 자본조성 관련 통일편익으로 나타나는 이득만으로도 이득이 통일비용 보다 크다. 즉, 2020~2035년 사이 통일을 가상할 때 10년 동안의 통일비용은 당시 GDP 대비 6.86%~7.13%, 통일편익은 같은 기간 동안 놀랍게도 GDP 11.2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는 획기적인 경제성장과 아울러 경제성장 내용이 개선된다. (우리 경제의 정상적인 경제성장 추세에 따른 경제성장률을 당분간 3% 정도라고 보면, 군 병력의 산업인력화 부분에 따르는 2.6%, “Buy Korean” 정책에 따르는 생산 증가 5.6%정도, 결국 도합 11.25% 경제성장)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일부 사회지도층 인사들과 일반 국민들의 인식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준다.

IV.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몇 가지 방안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는, 남측에서의 통일문제에 관한 올바른 국민적 공감대 형성은 국론분열에 따른 비효율성으로 인한 막대한 낭비를 제거하고, 북측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직간접적으로 협력하여, 남북 간의 소득격차를 축소하며, 직접적이고 과감한 대북 경제협력정책을 시도하는 것이다.

통일 후 통일의 마무리 과정에서 통일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으로는,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기간을 거치는 동안 남북지역을 분리 관리하는 방안 등 본 보고서가 제시하는 제반 정책들이 모두 실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대비한다면, 통일비용은 최소한으로 축소될 것이다. 그러나 준비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는 일은 우리의 능력 범위를 벗어나게 될 것이다.

V.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문제점들

- “피주기”라며 비난하는 공격
- 상호주의의 허와 실
- 북한 핵 문제
- 인도주의 및 인권문제
- 냉전논리

VI. 이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람직한 정책들

본보고서의 결과에 부합하는 내용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내는 데 모두 동참해야 한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통일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은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통일은 빠를수록 유리하다는 결과에 따라, 통일이 가급적 앞당겨 질 수 있는 방향으로 모든 관련 실제 정책들의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북측지

역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를 위한 투자는 통일 후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게 통일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는 데 지대한 기여를 할 것임으로,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과감하게 투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협력은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여 통일이 도래할 때까지 매년 남측 GDP의 0.7%~1% 규모 정도로 하는 것이 효과성과 부담능력을 고려할 때 적절하다고 본다. 미군은 현재는 말할 필요도 없고,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기간 10년까지는 물론, 그 이후에도 가급적 상당 기간 주둔하도록 협력관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한다. 통일 후 남북지역을 망라한 전국적인 구도에서, 조화로우면서도 유기적인 산업벨트가 형성되도록 철저한 사전 연구와 대비가 필요하다. 통일 직후 긴급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Emergency Plan을 비치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해 놓는다. 통일 후 남북 소득조정기간 동안에는 남북지역을 경제적인 면에서는 분리하여 관리한다. 통일이 2015년~2030년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남북 소득조정기간은 소요자금 조달과 남측국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10년 기간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통일비용 조달 시, 남측국민 직접부담 부분 가운데 세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은 남북소득조정기간 동안 GDP의 1% 수준으로도 가능하다. 통일 후 북측 토지는 절대로 사유화시켜서는 안 되고, 통일을 계기로 북측지역에 토지사용권을 위주로 하는 토지공개념 제도를 철저하게 제도화하여 시행하고, 이것이 점차 남측지역까지도 확산되도록 한다. 남측국민이 분단 전에 보유했던 일체의 북측지역 토지·건물소유권은 실물로 상환하지 아니하고, 1948년 남한 농지개혁법에 준하는 수준에서 현금보상을 한다. 통일 한국 초기 남북 소득조정기간 동안에는 군비지출을 남측 GDP 대비 1%를 넘지 않는 수준을 유지한다. 북측지역 실물자본(Physical Capital) 조성과정에서 “Buy Korean” 정책을 시행한다.

(※이 정책은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이어, 한국경제가 제2의 눈부신 경제도약을 이룩하도록 만들어 주므로, 경제 실리적 차원에서 놓쳐서

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이 되는 것이다.) 통일 후 남측지역에서 북측지역으로의 기술 이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정부차원에서 도 적극 지원한다. 남측지역의 퇴직 후 인력을 최대한 활용한다. 이들에 대한 보수는 당사자의 정년퇴직 이전의 보수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으로 하고, 조국과 민족에 대한 봉사의 보람과 함께 다소간의 소득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북측지역의 생산성을 신속하게 높여주는 훌륭한하고 저렴한 자원 활용이 된다. 통일 후 북측주민이 소지한 화폐는 실제 화폐시세에 따라 교환한다. 통일 후 북측주민 소득조정기간 동안, 북측주민의 임금 봉급 수준은 모든 분야와 종류를 막론하고, 소득조정기간 당시 북측지역 전반적인 생산성 수준에 맞도록 한다. 남북 간 소득조정기간 10년 동안, 북측지역에서는 노동 파업권을 잠정적으로 유보시킨다.

VII. 독일의 경우를 교훈으로

독일의 대표적인 중대실책 세 가지로,

- (1) 동독 사람들도 서독 사람들처럼 똑같이 우수한 사람들이므로, 동독 인력의 보수를 서독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 (2) 동독 사람들을 우대해주는 차원에서 동서독 화폐를 1:1로 교환한 것이다.
- (3) 토지에 대한 분단 이전의 소유권을 인정한 것이다.

독일은 통일에 대한 사전 준비 없이 갑자기 닥쳐온 통일에 대처하는 데 있어, 이러한 임기응변식 정책들이 심각한 부작용을 동반하며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경과하면서 독일은 통일에 따르는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GDP 규모가 미국, 일본 바로 다음가는 국가로서의 위치를 계속 유지

하고 있다. 독일도 통일 해놓고 저렇게 험매고 있는데 우리가 통일할 수 있겠는가라고 갈파하던 인사들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다. 독일이 시행했던 정책으로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부분은 결과적으로 동독주민으로 하여금 서독주민의 생활을 부러워하도록 만든 제반 형태의 원조와 정보제공이다. 바로 이것이 독일 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는데, 서독은 동독의 민심을 얻었던 것이다.

VIII. 통일 지향적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대북정책

우리가 영구히 분단상태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결론 속에서 우리가 통일을 감당해 낼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통일은 빠를수록 경제적으로도 유리하며, 통일을 계기로 북측의 경제생활이 현재와는 천양지차로 개선될 것이다. 남측의 경우에만 한정시켜 보더라도, 단군 이래 처음 맞이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성장을 능가하는 획기적인 경제성장의 시대를 맞게 될 것이라는 객관적 전망을 토대로 판단하여 본다면, 우리가 왜 통일지향적으로 방향을 잡고 필요한 대가를 치르면서 전력투구를 해 나가야 하는지 명확해진다.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통일지향적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에 GDP 대비 0.7~1% 규모의 대북 경제협력을 개시하고,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정세변화에 관계없이 이를 지속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본다.

<참고> 통일비용 계산 결과 요약 (2010)

남북 간 소득조정 기간 10년	(억 달러)	남측 GDP 대비 (%)
2020~2029	10,304	6.86
2025~2034	12,261	6.90
2030~2039	14,501	6.96
2035~2044	17,126	7.13

제1회의 토론 및 질의 응답



김 구 섭 (한국국방연구원장)

권구훈 상무와 신창민 교수는 통일은 빠를수록 좋으며 급변사태가 와도 걱정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통일비용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발표를 하였다. 동서독 통일 상황과 남북한의 통일 상황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남북 분단은 벌써 65년이 흘렀고, 동서독과 달리 남북 간에는 치열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었다. 게다가 최근에는 천안함 사건까지 발생하였다. 현재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하고 있으며 이들의 비대칭 전력은 우리에게 매우 위협적이다.

민족은 한 지역에서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같은 정치공동체 속에서 동일한 문화생활양식을 공유하는 하나의 집단이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남북한을 같은 민족이라고 보기에는 분단 65년이 가져온 이질화가 매우 심각하여 두 사회가 갑자기 합쳐졌을 때 어떠한 혼란이 올지 매우 걱정하는 바이다. 한국 사회는 이념, 계층, 지역, 세대 등 갈등이 아주 심각한데, 여기에 북한이라는 또 다른 이질적 요소가 추가되었을 때 과연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이 빨리 달성되어야 하며, 통일 이후의 통일편익은 분단비용보다 훨씬 크다. 그러므로 우리는 통일을 반드시 이뤄야 하며 이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배 종 렬 (한국수출입은행 선임연구위원)

두 분 발표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논의의 활성화

를 위해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질문을 하고자 한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통일을 걱정했던 것 같지는 않다. 통일에 소요되는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하여 고민하였지만 통일비용 자체를 두고 걱정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1990년대 초반 이후 국내의 논의는 비용 자체를 걱정했던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며, 그런 측면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권구훈 상무의 논문은 막대한 통일비용의 전제가 깔려있다. 비용보다 편익이 크다고 이야기하기 전에, 비용이란 기본적으로 허구의 숫자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만일 지금 통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북한 동포의 입장에서 통일 이전의 상황보다 통일 이후의 상황이 더 나으면 된다. 결과적으로 통일문제는 심리적 측면에서 봐야하는데,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주민들의 의사 표출이 가장 중요하다. 권구훈 상무는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는 언급을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통일 이전의 상황, 즉 한반도의 상황, 북한의 상황, 그리고 주변국의 판단에 의해서도 많이 달라진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권구훈 상무의 고견을 듣고 싶다.

둘째, 권구훈 상무는 GDP라는 숫자를 가지고 통일비용을 산정한 것 같다. 통일비용 혹은 통일자금 문제를 접근할 때 기업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196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을 할 때 국제사회, 특히 GNP라는 거시적 통계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한국의 경제개발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세계은행과 국제자문단이 모두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포항제철은 성공을 거뒀다. 당시 경제건설을 담당했던 사람들은 “대한민국은 경제개발을 한 적이 없고, 경제건설을 했다.”라고 했다. 경제건설은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당시 재무부장관은 국제사회에 돈을 빌리러 다녔다. 지금 북한의 상황도 경제건설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건설이 필요한 시대에 GDP 몇 %를 달성하는가 하는식으로 통일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생긴다. GDP로 통일비

용을 산정하면 기본적으로 비용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보조적인 지표를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비용이나 세금은 심리학적으로 부담을 주는 용어이다.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야 하고 내 봉급이 깎인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새로운 세대들의 심리적 구조 및 사유체계와는 잘 맞지 않는 개념이다. 즉,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 및 목표와 국민들의 가치관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기 쉽다. 국민들에게 심리적인 측면을 설명할 수 있어야 세금이나 비용이라는 용어가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의 경우에도 통일비용을 이야기하면 할수록 국민들이 통일을 싫어하는 구조가 잉태되었다. 지금 통일세를 이야기하면 국민들 사이에 통일을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독일에서는 통일 이전에 법학 전공자들의 실업률이 매우 높았는데, 통일 이후에 가장 선호하는 전공으로 바뀌었다. 통일 이후에 법률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바람에 법학 전공자들은 모두 일자리를 얻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의 주민의 심리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권구훈 상무는 통일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와 다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이 바로 시작되었을 때는 요구조건이 그리 높지 않다. 통일 이전보다 통일 이후의 생활수준이 나아지면 금방 통일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면 상대적 박탈감이 시작될 것이다. 현재 북한은 절대적 빈곤해소를 요구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상대적 빈곤문제가 제기되어 정치적 비용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권구훈 상무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 조 동 호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13년 전 이맘때쯤 이와 유사한 학술회의가 있었다. 당시 내가 근무

하던 KDI와 통일연구원이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고, 그 학술회의에서 내가 통일편익에 대하여 발표를 하였다. 그 이후 DJ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일에 관한 논의가 축소되다보니, 지난 10여 년 동안 이러한 논의가 거의 사라졌던 것이다. 13년이 흐른 지금도 그 당시 발표하고 토론했던 내용이 상당히 유효한 것 같다. 그때 내가 발표했던 내용과 오늘 토론 내용이 매우 유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다.

계산하지 않아도 통일편익은 통일비용보다 당연히 클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통일비용은 한정된 숫자이지만 통일편익은 통일한반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영원히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편익의 크기는 무한대이다. 기존의 통일비용 추정치들은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된다.

첫째, 통일편익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일비용은 순 비용(net cost)으로 봐야 하는데, 그동안의 통일비용 추정치들은 편익을 고려하지 않다 보니 총 비용(total cost)만 얘기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실제 비용(cost)을 과장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둘째, 북한경제의 현실적인 흡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통일비용이라는 것은 통일이 된 이후에, 매우 소규모이고 낙후된 북한의 경제수준을 남한 경제수준의 일정비율 이상으로 끌어올려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북한경제를 남한경제의 50% 수준으로 올려준다는 것은 남한에 있는 자동차의 절반을 북한에 준다는 뜻이다. 남한이 보유한 2,000만대의 차량 중에서 1,000만대를 북한에 주는 것인데, 우리가 자동차 1,000만대를 북한에 보내줘도 북한에는 운전할 사람이 없으며, 북한의 열악한 도로에서 그 많은 차량을 운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즉,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숫자이다. 북한 경제의 현실적인 능력을 고려해야지 책상에 앉아서 계산을 해봐야 터무니없는 숫자만 나오게 된다.

셋째, 통일비용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권구훈 상무께서 설문조사를 실시했을 때 정책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말씀과 일맥상통한다. 통일

비용은 그 비용에 해당하는 만큼의 현금이 북한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북한지역에 그만큼의 건설이 이뤄지는 것이다. 통일 당시에 우리 경제가 튼튼하고 여유가 있으면 북한에 고속도로 10개를 한꺼번에 건설할 수 있겠으나, 우리의 경제력이 부족하면 7개를 먼저 건설하고 3개는 기존의 국도를 이용하면 된다. 통일비용은 우리의 경제능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액수만 이야기하니까 터무니없이 큰 숫자가 산출되고, 국민들은 이것에 대하여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통일비용은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리가 충분히 부담할 수 있다는 신창민 교수의 의견과, 통일비용은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액수로 따져야 한다는 권구훈 상무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한다.

비용은 초기에 많이 소요되고, 편익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발생한다. 결국 초기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이다. 통일비용 때문에 가급적 통일이 지연되고 회피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만약에 통일을 위한 비용은 전혀 없고 편익만 있다고 할 때 이들은 당장 통일을 하자고 주장할 것이다. 이들이 통일을 반대하는 이유는 편익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알지만 당장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편익은 나중에 천천히 발생하니까 부담스러운 것이다. 통일편익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가 많은 비용부담을 해야 하니까 그 부담을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결국 핵심은 어느 세대가 통일비용을 부담할 것인가이다. 현 세대에 통일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비용 때문에 지연하고 회피하자고 말하는 것은 매우 이기적인 발상이다.

앞으로의 관건은 통일비용을 최소화시키고 통일편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대북정책, 외교정책, 그리고 국내외 경제정책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통일비용 자체만 논의해왔지만, 이번 학술회의를 계기로 통일비용에 관한 논의가 본래의 목적을 찾기를 기대한다.

내가 통일비용을 이야기할 때 흔히 드는 예시 한 가지가 있다. 즉,

통일비용은 수술비용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병에 걸린 아내의 수술비용이 크니까 아내를 죽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반성해야 한다. 아내가 살아있으면 가사노동의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자녀들 성장에 있어서도 어머니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또한 가정의 평화, 사랑, 행복은 아내가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라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영원히 그 편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마치 통일 한반도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통일편익은 영원히 발생하는 것과 같다. 그래서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을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매우 근시안적이며, 현 세대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이다.

마지막으로 신창민 교수의 발표문에 대하여 세 가지 간단한 질문을 하면서 토론을 마칠 것이다. 첫째, 신 교수께서 통일은 빠를수록 좋다고 하였는데 계산적으로는 맞는 이야기이다. 왜냐하면 통일편익은 영원히 발생하는 것이고, 비용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통일을 하면 통일편익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통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경제적, 안보적 측면에서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통일이 빠를수록 좋지만 현실상황이 어떠한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둘째, 10년 동안 경제적으로 분리하자는 주장이다. 즉, 북한주민이 남한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남한에서 취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인데, 이는 곧 사회적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고 나아가 정치적 분리까지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통일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긴다. 종합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는 부분임에 틀림없다.

마지막으로 “Buy Korean” 정책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통일 후 10년 동안 남한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것인데, 과연 국제사회가 이러한 정책을 용인해줄까 의문이 든다. 또한, 남한의 인플레이션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생기며, 북한이 필요로 하는 물자를 남한에서 충분히 생산해낼 만한 생산능력과 설비를 갖추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Buy Korean” 정책이 현실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거품을 만들고 무리를 줄 수 있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최 수 영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통일세 논의 이전에 가장 시급하게 그려보아야 할 것은 바로 통일 한국의 모습이다. 통일 이후의 정치제도, 경제체제에 따라서 통일비용 산출의 방식이 달라진다. 통일 한국의 초기 단계에 남북한 지역을 경제적으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결정에 대하여 국민들의 합의가 가능할지 그리고 북한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인지 등에 따라서 모든 논의가 달라질 것이다. 즉,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의 산출과 관련해서 통일 한국의 모습이 국민의 합의에 의해서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한다. 3단계 통일방안을 운용한다면 대략적인 그림은 그려지지만 구체적인 그림은 담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그림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통일비용 계산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비용은 현실적인 방법으로, 현실성에 기초해서 계산해야 된다. 통일비용은 계산방식에 따라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통일비용 계산을 위해서는 통일된 시점이나 그 이전의 현실적인 근거에 기초해서 출발해야 된다. 비용의 최소화를 위한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낙관적 전제는 사용할 수 있으나 이는 그리 바람직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통일비용 논의를 위해서는 분단비용, 통일비용, 그리고 통일편익에 대하여 국민들이 잘 알아야 된다. 단순히 학술회의를 통해서만 논의되고 신문지상에 잠시 등장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항상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분단비용, 통일비용, 통일편익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가 높아지도록 홍보하고 교육해야 한다.

최근 통일세에 대한 논란이 아주 큰데, 통일세는 그만큼 큰 부담이

기에 온 국민이 관심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통일세는 통일 전후에 따라서 명칭과 목적이 달라져야 한다. 통일 이전의 통일세는 “북한개발비용/자금(가칭)”으로,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발전비용/기금(가칭)”으로 부르는 것이 이치에 맞겠다. 즉, 목적에 부합하는 명칭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적에 부합하는 명칭을 결정하면 그에 합당한 재원 조달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목적이나 명칭에 따라서 재원 조달방법도 통일 전후로 달라질 것이다. 통일 및 개발과 직접 관련된 기업이나 국민들이 통일비용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원칙’은 큰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비용 조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세금 및 다른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두 분께서는 기본적으로 통일에 대하여 그리고 통일 이후의 편익에 대하여 매우 낙관적이고 긍정적으로 기술하였다. 비록 낙관적인 전망이 우세하더라도 장애요소들도 함께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문제점이나 비관적인 상황도 같이 아우르면 남북 경제통합의 시너지효과가 더욱 빛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통일비용 부담의 시작시점 및 종료시점을 결정해야 한다. 통일비용 부담의 구체적 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비용을 계산한다면 국민들이 공감하기 어려울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다. 통일그림에 대한 국민적 합의뿐만 아니라 통일지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통일의 편익이 크고 장기적이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통일을 원치 않는다면 통일은 요원하다. 즉, 국민적 합의로 통일비용이 산출되어야 하고 통일이 이뤄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왜 통일을 해야 하는지, 왜 우리가 통일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곧 납세자가 될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통일비용, 통일편익에 대하여 제대로 가르치고 홍보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야만 현

재뿐만 아니라 10년 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일비용 마련이 가능할 것이며 통일이 빨리 올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권 구 훈 (골드만삭스 상무)

통일비용에 대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설명을 하겠다. 우리는 통일비용을 계산하지 않았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계산을 하였고 상황과 개념정의에 따라 다르게 산출되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볼 때 독일의 통합은 동서독 간의 소득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가능했다. 독일 통일비용의 80% 이상이 동독 지원금으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20% 정도가 인프라구축에 사용되었다. 남북한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보면 독일과 같은 상황은 불가능하다. 남북한의 인구격차는 2대1이나, 동서독의 인구격차는 1대4 정도였으며, 남북한 소득 격차는 20대1로 매우 크지만, 동서독 소득 격차는 불과 1대3이었다. 한국의 상황에서는 얼마만큼의 비용이 필요한지 계산하기보다는 남한에서 얼마만큼의 비용을 부담할 능력과 의향이 있는지 결정하고 난 후, 이에 맞춰서 정책을 세워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이 중요한 것이지 통일비용 자체를 먼저 계산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뒤바뀐 것이다.

우리는 모두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북한 경제데이터를 사용하며, 여기에 그동안 쌓아온 북한에 관한 지식이나 동유럽의 상황을 참고하여 추측하는 정도이다. 북한 경제에 관한 특별한 데이터를 우리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다.

■ 신 창 민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Buy Korean” 정책은 최대한의 산출량을 위해서 노력을 하되, 불가능한 부분은 수입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 최수영 박사께서 통일세 명칭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통일세는 별칭이자 가칭이다. 통일 이전에는 ‘경협기금’으로 부르고, 통일 이후에는 ‘지역발전기금’으로 명칭 사용을 제안한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는 투자계획은 정부가 나서면 안 된다. “투트랙”으로 정부와 별도의 공사를 설립하여 북쪽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을 형성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부가 단독으로 진행할 경우 남북한 정부간의 마찰이 생기면 모든 사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별도의 기구를 조직하되 국가 최고기관에 소속된 기구로 하여 수출입 은행과 협력하는 모습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호주의가 매우 합리적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남북한이 일대일로 주고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통일달성이 목적이다. 북한 핵 문제가 시급하니 한가하게 통일문제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는 일부의 의견도 있는데, 우리는 북한의 핵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너무 두려워해서도 안 된다. 진보와 보수 양쪽 진영 모두 단점이 있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중요한 부분은 같이 공감하면서 함께 통일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북한을 도와주면 북한이 힘을 길러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마지막으로 분리 관리는 “push effect”와 “pull effect”를 적절하게 사용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본다. 북한에게 고기를 직접 잡아주기보다는 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이 옳다고 본다.

제2회의: 통일비전과 통일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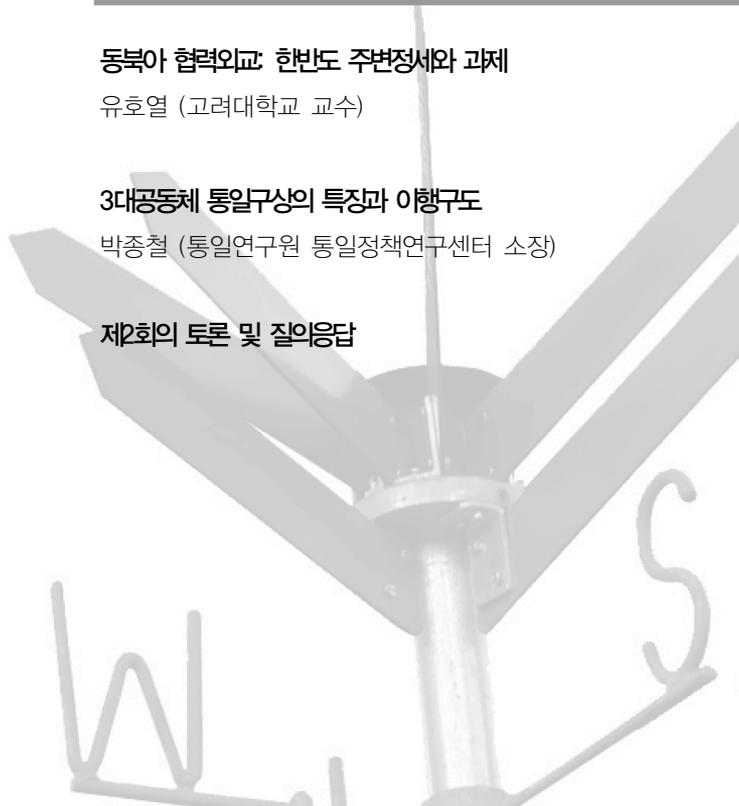
동북아 협력외교 한반도 주변정세와 과제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3대공동체 통일구상의 특성과 이행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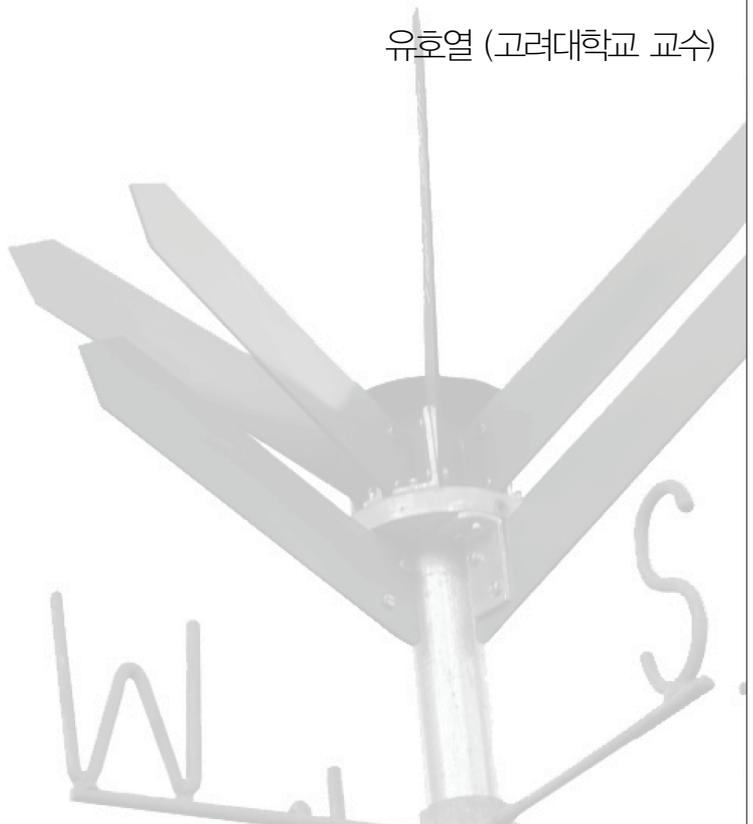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제2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동북아 협력외교:
한반도 주변정세와 과제**

유호열 (고려대학교 교수)



:: Summary

1. 문제 제기

동북아 협력외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과 이에 대한 미시적 대응 차원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새로운 G-2와 G-20 시대의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교차하는 지각판 충돌의 결과, 협력외교의 대상과 과제는 다층적, 복합적 구도 속에 보다 전략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입장과 전략

초강대국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한미연합사를 통한 전시작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한반도 변화 과정에 가장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21세기 중반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영토 보존을 위해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주요 관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남북 경계심이 고조되었고, 북한에 대한 안보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의 책임자이면서 냉전시기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세력이었으나 탈냉전기, 특히 급부상하는 중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화되고 이해관계도 소원해졌다.

3. 동북아 지역의 협력외교의 방향과 과제

독일 통일에서 서독정부의 ‘2+4 전략’은 한반도에서 점진적/급진적 통일이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유용한 전략이다. 독일의 경우 전승국의 권리를 보장하는, 또는 그 틀에서 이루어야 하는 통일에 비해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적극적 지지와 소극적 반대를 묶어 통일로 나아가는 지렛대로 삼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국가들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

지를 유도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통일 한국은 주변 국가들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주변국 어느 나라도 최소한 심각한 손실이나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고, 최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non-zero-sum 식’ 접근이어야 한다. 협력 외교의 첫 단계는 주변국들과의 한반도 정세 및 통일과정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향후 공통으로 개발할 의제/과제들을 심층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제도적·재정적 기구를 구성한다.

I. 문제 제기

이명박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 분단관리에서 평화통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하면서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을 역설하였다.

이 대통령의 경축사 제안은 평화적이고 점진적인 3대공동체 통일 구상과 이를 대비한 현실적 방안에 대한 준비, 그리고 통일비전 속에 동북아 협력외교의 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동북아 협력외교는 독일의 통일외교를 모델 또는 교훈으로 삼아 주변국과 신뢰를 강화해 언젠가 통일의 기회가 닥쳐왔을 때 전폭적인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기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해 동북아 국가들과의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다.

한반도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양자 및 다자 간 차원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구성하고 있으며 현상 타파를 전제로 한 통일에 대해서는 통일의 방식과 시점에 따라,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과 역할에 따라 더욱 복잡하게 얽혀있다.

동북아 협력외교는 한반도를 둘러싼 현안과 이에 대한 미시적 대응 차원은 물론 아시아-태평양, 나아가 새로운 G-2와 G-20시대의 전 세계적 차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거시적, 구조적으로 교차하는 지각판 충돌의 결과, 협력외교의 대상과 과제는 다층적, 복합적 구도 속에 보다 전략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II. 북핵 현안을 중심으로 한 주변정세의 변화

북한은 당 대표자회를 통해 당 중심의 새로운 권력구조개편과 이에 따른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당 중심의 권력개편이 이루어짐에 따라 이제까지 선군정치 하의 권력의 핵심축인 국방위원회는 과거 주석제 하의 중앙인민위원회와 유사한 기능과 구조로 전환될 것이다. 당의 노선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군부의 강경세력이 주도하는 군사모

협주의 또는 비타협적 강경노선은 약화될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안 1874호 및 미국 정부의 새로운 대북제재 조치의 이행 결과에 따라 북한은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새로운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기 위해 평화공세를 전개할 가능성이 있다. 유엔안보리 및 아시아지역안보포럼 의장성명에서 나타났듯이 천안함 사태가 북한에 일방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구 전략이 모색될 경우 중국 제안에 따른 6자회담 재개안을 수용할 것이다. 반면, 미국의 경제제재가 기대 이상의 효과를 거둘 경우, 북한의 반발에 따라 6자회담은 지연되고 그 과정에서 북·중, 북·러관계는 강화되는 반면 북·미, 북·일 또는 남북관계는 경색될 것이며, 북·중·러 대 한·미·일의 신냉전구도의 재연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은 북한의 정세를 예측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이나 그의 건강 악화는 이미 상수화된 상태이기에 2010년 하반기는 상반기에 비해 약화된 김 위원장의 권력통제력과 새로 부상하는 김정은 중심의 후계·후견세력 간의 갈등 대립의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 김 위원장은 당 중앙군사위원회와 국방위원회를 중심으로 친정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나, 새로운 권력 핵심인 김정은은 당 중앙위를 중심으로 선군정치를 서서히 당-국가체제로 개편하고 내각에서는 경제 발전을 중요 현안으로 북·중 또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해결하려는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과 정책 표류가 예상되기도 한다. 경제정책과 당의 지도노선을 둘러싼 보혁/강온 간 대립은 정책의 본질적 논의보다는 이념과 친소관계에 따른 힘겨루기 양상으로 비화되면서 당과 국가의 정체성의 혼란과 정책적 난맥이 초래될 수도 있다. 표면상으로는 김정일, 김정은 부자 세습과 이에 수반하는 권력배분에 따른 갈등과 투쟁이지만, 결국은 당 대표자회를 통해 새로이 권력 핵심부에 진입한 신/구 세력 간 힘겨루기가 심화될 수 있다. 장성택 부장의 거취와 관련, 김 위원장의 의도대로 김정은 후계구도의 핵심 주도세력이면서도 김정은의 권력이 예상보다 조기에 신속히 안착되기

나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대폭적으로 강화될 경우 본인은 물론 자신의 핵심 측근들의 안위를 위해 김정은에 대한 충성과 유화책을 우선시 할 것이나, 경우에 따라 김정은에 대한 선제적 압박 공세와 중국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을 유도함으로써 중국식 모델을 모방한 북한식 개혁/개방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6자회담이 연내 개최되더라도 김정일 생존 시 핵 포기과 같은 전향적인 결단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나, 북한의 발전된 형태의 핵개발도 뜻한 대로 실현되지 못할 것이기에 북핵문제는 북한의 리더십 교체나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관리 대상으로 남겨질 가능성이 크다. 개발한 핵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지치게 하거나, 북한 핵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동결/폐기하는 대신 새로운 명분이나 구실 하에 ‘대화의 유혹’을 지속할 것이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6자회담 참가국이자 동아시아의 주요 핵심 세력들은 각자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상대방의 선택에 대한 대응으로서 북핵문제 해법을 추구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각국의 전략대화가 양자 및 다자차원에서 그리고 6자회담 틀 안에서 또는 6자회담 틀 밖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향후 2012년 한국을 비롯한 주변 각국의 정치 일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비핵화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 및 통일 이후에도 통일 한국의 발전에 긴용한 사항이다. 6자회담 틀 안에서 또는 6자회담 틀 밖에서 북한을 적극 설득하여 수락을 받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6자회담 관련 국가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조율이 필요하다. 6자회담의 기본 골격이 되었던 9.19합의(2005)나 2.13합의(2007)에 토대를 두고 한반도평화체제구축, 동아시아안보대화,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북·미-북·일 관계정상화 등 관련 워킹그룹-포럼의 목표 의제들과도 연결되어있고 무엇보다 핵포기에 대한 북한의 진정성 확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북한의 핵 문제와 관련

한 전반적인 정책구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주변국들의 전략 구상과 협력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통해 체제를 보존할 것인가, 아니면 주변국가, 특히 중국, 미국, 한국 등 관련 국가들로부터 체제안전을 보장받으면서 경제를 재건하여 포스트 김정은 후계체제에서도 정권과 체제를 유지할 것인가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이다. 금년 신년공동사설에서 보듯이 북한의 대남, 대미, 대중관계에서 유화적 변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북한의 핵문제 해법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핵심 관건인 북·미 양자대화에서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철회와 북·미관계가 평화관계로 전환되는 것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으며 북핵 프로그램의 동결과 폐기 등 확산방지에 상응하여 대북제재 해제와 북미평화협정 체결 등 관계정상화 및 향후 주한미군의 철수 요구 등으로 이어질 것에 대비하는 한편 인도나 파키스탄처럼 자신들은 핵보유국으로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보장하면서 한반도 수준에 적합한 핵무기와 운반수단은 미국 등 핵보유국과의 핵 군축을 통해 조정할 사항으로 주장할 것에 대응한 6자회담 참가국들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 남북관계 및 한반도 새로운 질서 구축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담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통해 북한 내부의 상/하층부 분리 및 상층부 내부의 변화를 유도하고, 주변국들에게도 한국 정부의 남북관계 및 통일에 대한 비전을 통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을 각인시키는 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III.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각국의 입장과 전략

가. 미국

초강대국 미국은 한미방위조약에 따라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으며 2015년 12월까지 한미연합사를 통한 전시작전권을 행사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변화 과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미일동맹도 유지하고 있으나 동북아에서 급신장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전략적 협력과 경쟁의 관계에 놓여 있다.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최대 목표는 다른 지역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어서 북한의 핵개발과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억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이나 내부 정세가 혼란하여 통제 불능일 경우 이러한 상황이 악화되거나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동맹국 및 국제사회와의 협조 하에 군사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결과로써 북한정권이 붕괴할 경우 북한의 정권교체 및 나아가 남한 주도의 통일로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 협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특히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량살상무기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즉각적인 군사작전에 돌입할 것이며 유엔안보리의 결정이 이루어지면 중국과 러시아 등 동북아 국가들과도 협조함으로써 북한지역에서 관련 국가들의 독자적 개입이나 충돌을 방지하려 할 것이다.

북한의 개혁개방과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남북한이 점진적 단계별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통일 단계에 진입하게 될 경우 또는 독일의 경우처럼 북한주민의 급격한 남한으로의 통합 요구가 증대할 경우 미국은 동맹국인 남한의 주도적 통일을 지지할 것이나 반미나 친중 정권에 의한 통일은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나. 중국

21세기 중반 미국에 버금가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국은 자국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영토 보존을 위해 동북아 및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중요 관건으로 간주하고 있다.

비록 고도성장에 따른 경제력을 바탕으로 지역 강국을 넘어 세계 국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갈등과 마찰이 발생할 것이나, 큰 틀에서 공존하는 경쟁,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전략대화를 지속할 것이다.

북한은 중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이자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국가이나,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협력관계의 발전에는 한계가 있으며 세대교체에 따른 대북인식과 전략적 중요성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북한체제나 정권의 안정을 위한 정치, 경제, 외교적 지원을 할 것이나, 군사적 지원은 유엔의 테두리 안에서 미국과의 조율을 통해 실행할 것이다. 미국 또는 한미 양국군의 일방적인 북한 영토 진입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개입하려 할 것이며 동맹관계를 통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 등 현상유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되 불가피할 경우 전략적 개입을 추진할 것이다.

중국의 발전 경험과 북·중관계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의 폐쇄성과 낙후성은 중국식 사회주의와도 맞지 않으며 심화된 한중 전략적 동반자관계의 틀 속에서 한국 주도의 통일 구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표명할 것이다. 중국과 북한은 같은 사회주의 국가로서 공산당을 통한 혈맹의 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완충자로서의 지위나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동북3성의 조선족의 위상이나 영토의 보존을 위한 전략적 결단을 중시할 것이다.

중국은 통일 한국의 건설에 대해서 한국인의 의지와 결단을 존중할 것이나 통일한국의 대미 군사동맹에 대해서는 민감한 이해관계를 표출할 것이다. 한미동맹의 유지 그 자체에 대한 찬반보다 주한미군, 또는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중국 본토와 직접 대치되는 국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발할 것이다.

통일과정에서 북한 내 중국의 이해관계를 보존하려 할 것이며 북한 내 친중세력의 안전에 대해서도 피난처와 보호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 할 것이다. 최소한 통일과정이나 통일 이후의 한반도가 중국에 적대적이거나 비우호적인 정권의 수립을 방지하는 것이 단기적인 목표이나 중국의 위상과 영향력이 강화될 수록 인접국의 친중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표면화할 것이다.

다. 일본

일본은 한반도의 분단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로 인해 대북 경계심이 고조되었고, 북한에 대한 안보 불안감이 증대되었다.

한반도의 분단이 자국의 안전과 이익에 배치되는 상황이며 사실상 가치동맹인 남한 주도의 통일 한국의 형성은 단기적으로 또는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이해와도 일치됨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한반도의 분단 또는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은 중국의 역할과 영향력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일본의 대미 의존도는 심화되고, 일·중 간의 총체적 경쟁 구도 역시 일본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게 전개되고 있다.

일본 역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통일이란 현상타파적 현상보다 선호하고 있으나, 동아시아공동체 구성을 위해 남북분단 또는 적대적 세력의 존재보다 우호적, 비적대적 세력과의 공존, 협력이 더욱 현실적이며 보통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일본은 한반도에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미국과의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통해 한반도 문제에 개입 또는 대비할 것이며 대량살상무기의 안전한 통제 및 북한으로부터의 대량난민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점진적 단계적으로 남북한이 통일단계에 진입할 경우, 일본은 내부적으로 통일 한국의 등장에 따른 자국의 안보와 이해득실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나 미국의 입장에 적극 편승하여 통일

한국이 일본에 대해 새로운 위협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할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영향력 증대에 대한 우려와 통일 한국 내부에서 대일 적대시 정권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한 미·중·일 전략 대화를 강화해 나갈 것이다.

라. 러시아

러시아는 한반도 분단의 책임자이면서 냉전시기 미국과 함께 한반도의 주요 세력이었으나 탈냉전기, 특히 급부상하는 중국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화되고 이해관계도 소원해졌다. 그러나 러시아의 전통적인 동북아 지역에서의 이해관계를 고려할 때, 향후 러시아 내부 정세 변화에 따라 주변 각국의 경쟁과 협력 구도 구축에 주요 역할자로 부상할 수도 있다. 러시아는 미-중, 일-중 간의 중재자 또는 균형자로서의 역할보다는 국제사회와 동북아 지역을 연결하는 매개 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통일 한국 건설에서도 추동력을 발휘하거나 억제/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

동북아에서의 역할 축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서 배제되지 않음으로써 자국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이며 통일 이후 접경 지역을 통한 새로운 경제 및 안보 체제 구축에서 러시아의 지지와 협력은 필수적이다.

IV. 동북아 지역의 협력외교의 방향과 과제

독일 통일에서 서독정부의 ‘2+4 전략’은 한반도에서 점진적/급진적 통일 시 모두 적용될 수 있는 불가피한 선택이자 유용한 전략이다. 협력외교는 외교의 목적과 방향, 과제와 로드맵, 그리고 결과에 대한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사진/비전이 제시되어야 한다. 비밀외교나 비밀거래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가급적 공개적이고 다자적인 틀 속에

서 양자간 맞춤형 외교가 효과적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전승국의 권리를 보장하는, 또는 그 틀에서 이루어야 하는 통일에 비해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적극적 지지와 소극적 반대를 묶어 통일로 나아가는 지렛대로 삼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동북아 지역 국가들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지를 유도해 내야 하는 과제가 있다. 특히 유엔안보리의 결정은 급변사태/점진적 통일 시 법적이며 제도적인 접근과 안정적 진행에 유효한 보장책이다.

통일 한국은 주변 국가들의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감안할 때, 최소한 주변국 어느 나라에도 심각한 손실이나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고, 최대한 이익이 보장되는 ‘non-zero-sum 식’ 접근이어야 한다. 관련국들 간의 공통적인 이해관계의 구축과 상호배타적인 경쟁관계의 형성은 가급적 제거하는 방향에서 동아시아 공동체, 동북아 다자 안보협의체 등 중첩적인 안보, 외교, 경제, 정치, 문화적 공동체를 구성하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규정하고 규율하는 경험을 축적하여야 한다. 6자 회담 틀 내에서 평화체제포럼, 동북아안보포럼을 동아시아 다자 안보기구로 전환하고 ASEAN+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아시아협력대화(ACD),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 등 다양한 다자협력체를 활용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공식·비공식, 1.5트랙의 다자대화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

협력외교에는 주변국뿐만 아니라 북한 내부의 엘리트와 주민들에게도 통일국가의 출현이 주변국의 보장과 협력 속에 추진됨으로써 중국, 러시아 또는 미국이나 일본 등 신뢰할만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안위와 미래를 보장할 수 있다는 신뢰감과 기대감을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反인권적이고 도발적인 지도체제와의 결별과 주변 국제사회로의 신속한 편입이 협력외교의 틀 속에서 이루어 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제시함으로써 안정적인 체제전환과 통일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협력외교는 국제법과 유엔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질서있게 추진하여야 하며, 협력외교를 담당할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고 필요한 예산을 사전에 비축해 두어야 한다. 동북아 지역국가들에게 경제적 부담보다는 경제적 기회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의 경제력을 확고히 발전시켜 놓아야 한다.

협력외교의 첫 단계는 주변국들과의 한반도 정세 및 통일과정에 대한 인식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향후 공동으로 개발할 의제/과제들을 심층적으로 개발해야 하며, 이를 지원할 제도적·재정적 기구를 구성한다.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협력외교의 기반으로 활용하되, 6자회담 참가국들 간의 실무자급, 전문가급, 민간급 전략협력기구를 구성하여 다양한 의제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상호/다자 간 신뢰 증진을 도모한다. 동북아 지역에서의 역사, 문화, 민족문제를 학술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협력사업을 개발함으로써 통일 한국이 동북아 질서 구축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동북아 지역의 학생(초/중/고/대)들 간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공무원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각 담당 영역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분야별 표준화 작업을 실시하여 동북아 공동체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한다. 동북아 지역의 정치인과 차세대 리더들의 인사 교류를 활성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동북아 교류협력발전기금을 한·미·일·중·러 각국 정부차원과 민간차원 간의 협조를 통해 조성하되 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 협력외교는 차기/차차기 세대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간 또는 정권 차원에서 졸속 시행하지 않고 국민들의 합의 속에 통일의 비전을 마련하고 꾸준하고 지속적인 대내외 기반 구축에 나서야 한다.

3대 공동체 통일구상의 특징과 이행구도

박종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 Summary

광복절 경축사에서 3대공동체 통일구상이 발표된 것은 정책목표가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민족의 장래와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통일이 당위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하며, 우리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방향을 수용하면서 상황 변화에 맞게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의 공동체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이며, 공동체 간 위상은 평화공동체 및 경제공동체가 동급의 위상을 지닌 반면, 민족공동체는 상위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공동체 간 우선순위를 보면, 평화공동체가 가장 우선시되고 그다음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순서로 중요하다. 그리고 공동체 간 이행순서를 보면, 3개의 공동체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추진되는 순차병행구조에 입각해 있다.

3대공동체는 각각 목표, 전략, 주요 과제를 지니고 있다. 3대공동체의 주요 과제를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단계로 구분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는 상황에 따라 압축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상황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대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3대공동체의 이행계획의 구체화와 함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 통일대비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비한 재원확보, 인력양성, 법제도적 준비, 통일외교, 국민적 합의 등이 통일역량강화를 위한 과제이다.

I. 문제제기: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이명박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담론을 국가적 어젠다로 제시하고 이를 위해 3대공동체 통일구상을 제시한 것은 통일과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의미한다. 특히 광복절 경축사의 가장 큰 의미는 통일담론을 국가적 어젠다로 제시함으로써 이를 위한 국민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통일담론이 대두한 것은 통일이 필요하며, 통일이 가능하고, 한국 주도의 통일이 역사적 필연성이라는 인식의 결과이다.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이 필요하다. 이명박 정부는 그동안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형성을 노력해왔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관계의 패턴을 유지하려는 관성에 집착하는 한편, 권력승계를 둘러싼 내부문제 등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켜왔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북한의 핵개발, 북한의 인권문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 등 북한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북한체제의 변화와 본질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핵화, 평화정착, 북한의 정상국가화 등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대내외 정책과 대남정책은 북한이 세계화의 흐름에 역행하는 방법으로 생존하기 위한 북한식 생존전략의 결과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은 북한체제의 변화를 어떤 방식으로 이끌어 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은 통일이라는 최종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북한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궁극적 방법은 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변화와 통일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또한 통일이 필요한 현실적 이유도 있다. 통일에는 통일비용만 수반

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통일편익도 따라온다. 통일이 되면 분단비용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체성 회복, 인구 8천만 명의 중견국가(middle power)의 위상 확보,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국제적 위상 제고 등 유·무형의 다양한 통일이익이 있다. 이러한 현실적 이유를 고려해 보아도 통일이 필요하다.

둘째,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담론이 대두한 것은 세계사적 흐름과 남북한의 상대적 국력차이를 반영한다. 분단 이후 60년 이상 지속된 남북한의 체제경쟁과 대립은 세계사적으로 볼 때 이미 판가름이 내려졌다.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는 남북한의 체제경쟁에 종지부를 찍었다. 세계화와 개방화의 세계적 흐름에 누가 잘 적응하느냐가 향후 한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은 통일이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한국 주도 통일의 당위성과 필연성이다. 남북한의 상대적 국력차이는 모든 면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경제력, 군사력 등 하드 파워와 문화적 역동성, 개방성, 국제사회와의 네트워크 등 소프트파워 측면에서 남북한 간 국력차이가 현격하다. 단지 북한은 모든 국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군사력과 사회통제, 국가전체의 군사화로 종합적 국력 열세를 만회하기 위한 최후의 방어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주도로 한국의 가치관을 반영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역사적 당위이다. 종합적 국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한국이 통일에 수반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한국이 표방하고 있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세계화, 개방화, 다문화지향성, 개인의 권리와 창의력 존중 등의 가치관이 통일 한국의 가치관이 될 수밖에 없다.

넷째, 국가정책 목표로 통일이 설정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서는 통일을 국가적 목표로 설정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통일정책이 실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국가목표가 분단 관리 및 평화공존에서 통일로 바뀌어야 한다. 또한 정책목표가 분단상

항 관리 및 남북관계 관리에 중점을 두는 대북정책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 정책과 단기적 정책을 고려하는 통일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

등산에 비교하자면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지도, 안내자, 보급품을 필요로 한다. 통일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지도가 통일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통일에 이르는 개략적 경로를 표시한 안내판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에 이르는 길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정치적 지도력이라면, 보급품은 통일을 준비하는 종합적 역량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구상과 정치적 지도력, 통일대비역량이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우선 통일에 이르는 안내판인 통일구상의 내용을 가다듬어야 한다. 다음에서 3대공동체 통일구상의 특징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3대공동체 통일구상의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3대공동체 통일구상의 특징

이명박 정부는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 여러 가지 대북정책을 채택했다. 이명박 정부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남북한 간 교류협력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개발, 북한의 군사적 위협 지속, 북한체제의 변화 미흡, 북한의 대남정책 및 행태의 불변 등이 남북관계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또한 대북정책이 분단상황의 관리에 초점을 두고 통일에 대한 지향성이 희석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포괄적으로 반영한 것이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이다.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은 새로운 대북정책의 원칙에 입각하여 비핵화와 평화정착, 경제협력, 사회문화협력, 인도주의 문제 등에 대한 중

합적 정책을 담은 것이다. 상생공영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심전략은 비핵·개방·3000구상이다. 이것은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북한의 개방·개혁과 정상국가화를 추구하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을 위한 5대 경협분야(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생활향상)를 핵심과제로 제시하였다.¹ 그리고 비핵화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히 비핵화 추진전략으로 일괄타결방안인 그랜드 바겐이 제시되었다. 즉,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경협프로젝트와 연결한 종합적 방안을 제시한 것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이다.²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그동안 발표된 대북정책의 여러 가지 구상들을 망라하면서 이를 통일이라는 목표와 접목시켜 큰 틀에서 재구성한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노력과 통일을 염두에 둔 고려사항들이 3대공동체 통일구상에 반영되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비교하면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첫째,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통일방안이 아니라 통일구상이다. 통일방안은 통일절차, 통일비전, 통일과정, 통일방법 등을 포괄하는 큰 틀이다.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아직까지 우리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이다.³ 반면, 통일구상은 통일방안을 전제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 방향과 전략에 대한 정책적 주안점을 담은 것이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하면서 변화된 대내외 환경을 고려하여 통일을 위한 정책추진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둘째,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통일을 공동체 형성 차원에서 접근하고

¹여인근 외, 『비핵·개방·3000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 (서울: 통일연구원, 2009).

²한반도 새로운 평화구상의 내용과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박종철, “비핵화와 평화구상에 대한 한국의 전략,” (민족화합범국민협의회 정책토론회 발표 논문, 2010. 3. 30).

³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체계와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04).

있다. 이것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통일을 공동체 형성의 차원에서 접근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즉, 통일을 국가형성이라는 제도적 관점이나 정치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통의 가치관을 지니고 정서적 유대감과 상호이익의 교환관계를 바탕으로 내적 응집력과 정체성을 지닌 집단적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통일이 영토의 결합이나 국가형성이라는 물리적 차원을 넘어서 공통의 가치와 사회적 교환망의 형성을 통해 공동체적 질서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셋째, 공동체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라는 상위의 공동체 하에 세 개의 하위공동체로 구성되어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는 분야별 하위공동체인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정치공동체가 있으며, 분야별 공동체의 복합체인 민족공동체가 있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주요 공동체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3가지를 상정하였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평화정착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평화공동체를 새롭게 상정하는 한편,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포함하는 복합공동체로 민족공동체를 상정하였다. 평화공동체가 강조된 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에서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가 제시되었었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행복공동체 대신 여러 분야의 공동체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공동체로 민족공동체를 제시하였다.

넷째, 공동체 간 위상을 기준으로 보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는 동급의 위상을 지닌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정치공동체가 존재하고 이것을 포괄하는 상위의 공동체로 민족공동체가 존재했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에서는 동급의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가 존재하며 이것을 포괄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민족공동체가 존재한다.

다섯째, 공동체 간 우선순위를 기준으로 보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에서는 기능적 통합이론을 반영하여 경제공동체가 가장 중시되고, 그 다음 사회문화공동체, 정치공동체 순으로 중요성이 설정되었다. 기능적 통합론에 입각하여 비정치적이고 비군사적인 경제분야에서 협력을 시작하여 이것이 다른 분야로 확산(spill-over)되는 것을 가정하였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평화공동체를 우선시한다. 이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대남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비핵화와 평화정착 없이는 협력과 나아가서 통일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여섯째, 공동체 간 이행순서에 대해서 분리론, 단계론, 병행론이 있다. 분리론은 공동체 간 상호 관계가 없으며 공동체는 단지 분야별 유형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단계론은 각 공동체가 단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선행 공동체가 완성되고 나면 그 후에 다른 공동체의 형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병행론은 여러 개의 공동체가 병행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이다. 병행론에는 동시병행론과 순차병행론이 있다. 동시병행론은 여러 개의 공동체가 동시에 이행되는 것을 의미하며, 순차병행론은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선행 공동체가 이행되면 그 뒤에 후행 공동체가 이행되는 것을 의미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정치공동체의 동시병행을 가정하였다. 물론 경제공동체가 가장 중시되며, 정치공동체는 경제공동체와 사회문화공동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인 전제는 분야별 과제가 동시병행적으로 이행된다는 것이었다.

3대공동체가 상호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분리론은 타당하지 않다. 특히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는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3대공동체 간 우선순위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이를 엄격한 단계론의 입장에서 해석하는 것은 기계적인 해석이다. 3대공동체를 단계론의 입장에서 해석할 경우 실현가능성이 의문시된다. 단계론에 입각할 경우 각 단계별 완성의 개념 정의, 선행 단계가 완성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의 이행시기 선정 문제 등이 발생한다. 이럴 경우 비핵·개방·3000구상의 해석을 둘러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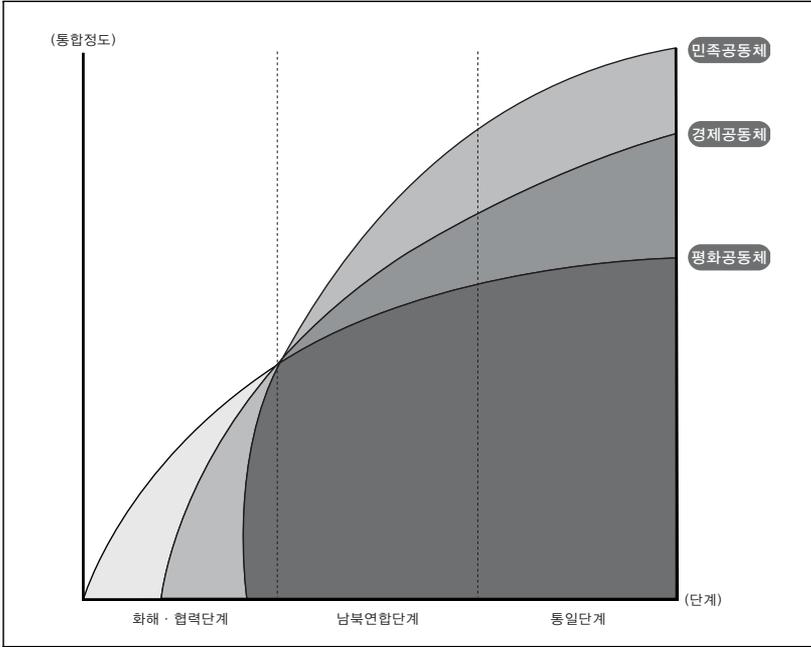
고 단계론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병행론으로 볼 것인가와 같은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3대공동체의 이행순서로는 순차병행론이 적절하다. 3대공동체 중에서 평화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며 민족공동체가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동시병행론은 부적절하다. 따라서 평화공동체를 우선 시작하되 약간의 시차를 두고 경제공동체를 추진하고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를 바탕으로 민족공동체를 완성하는 순차병행론이 적절하다. 이에 입각할 경우 <그림 1>과 같이 세 개의 공동체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서로 맞물리면서 중첩된다. 세 개의 공동체의 맞물림은 남북연합 이후 두드러진다.

<표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3대공동체 통일구상의 비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3대공동체 통일구상
공동체 종류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정치공동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공동체 간 위상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정치공동체 < 민족공동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 민족공동체
공동체 간 우선순위	경제공동체 > 사회문화공동체 > 정치공동체	평화공동체 > 경제공동체 > 민족공동체
공동체 간 이행순서	동시병행론	순차병행론

<그림 1> 3대공동체의 순차병행구도



Ⅲ. 3대공동체 통일구상의 이행구도

앞에서 3대공동체의 상대적 위상, 우선순위, 이행순서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특히 3대공동체의 주요 과제를 추진할 경우 순차병행론의 실행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차적 병행구도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3대공동체 통일구상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상정하고 있는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단계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3대공동체는 각각 어느 한 단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통일과정의 모든 단계를 망라하여 추진되어야 할 정책분야이다.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는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

국가의 전 과정에 걸쳐 실시되어야 할 정책분야이다.

그런데 순차병행론에 입각할 경우, 각 단계별로 중점추진분야 또는 선도분야(leading sector)가 있다. 화해협력단계의 선도분야는 평화공동체이며, 약간 시차를 두고 경제공동체가 추진된다. 그리고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경제공동체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통일단계에서는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과제가 중요하다. <그림 1>에서 이러한 단계별 선도분야를 표시하면 오른쪽 아래방향의 사선으로 나타난다.

물론 통일과정이 반드시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달성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통일과정에는 예측불가능하고 통제불가능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통일과정이 압축적으로 단기간에 진행되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단계별 정책과제의 우선순위와 이행계획은 기본방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적실성을 지닌다.

두 번째 고려사항은 공동체 간 연계성이다. 평화공동체와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의 이행과정에서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통합적 실행방안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평화와 경제의 연계이행방안, 평화와 민족공동체 형성의 연계이행방안, 경제와 민족공동체 형성의 연계 이행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에서 3대공동체 각각의 목표, 전략,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평화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평화공동체의 목표는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먼저 한반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조 정착은 소극적 평화를 위한 억지력 확보 차원의 안보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전쟁발생의 구조적 원인을 제거하는 적극적 평화를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평화공동체의 전략은 비핵화를 위한 그랜드 바겐과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한반도 신 평화구상이다. 그랜드 바겐은 북핵프로그램의 핵심 부문을 폐기하면서 북한에게 확실한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국제지원을

본격화하는 일괄타결방안이다. 그리고 평화구조 정착을 위한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구상’은 북한의 핵무기 포기, 북핵 포기 시 대북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남북고위급회담 설치, 대북 5대 경협프로젝트 추진, 남북 간 재래식 군비감축을 포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화해협력단계에서 평화공동체는 선도분야로서 비핵화와 평화정착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남북연합단계에서 평화공동체의 과제는 군비통제와 군축이며, 통일단계의 과제는 남북한 군사통합 및 군사력 재편이다.

둘째, 경제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경제공동체의 목표는 북한 경제발전과 남북경제통합 준비이다. 북한 경제의 발전은 북한 경제의 개방화와 대내적 개혁을 의미한다. 북한 경제의 발전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필요조건이며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줄임으로써 통일에 대비하기 위한 조건이기도 하다. 또한 북한 경제의 발전은 북한사회의 자율성 확보와 국제사회에 대한 개방화를 위해 필요한 조건이다. 경제공동체의 또 다른 목표는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 증가와 남북경제통합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경제공동체의 전략은 비핵·개방·3000구상에서 제시된 방안들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비핵화 및 북한의 정상국가화와 병행하여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5대 경협프로젝트의 이행계획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화해협력단계에서 경제공동체의 과제는 비핵화의 진전과 병행하여 일차적으로 북한주민의 생활향상, 교육기술지원 등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비핵화의 이행과 관련하여 에너지협력과 CTR(Comprehensive Threat Reduction)도 필요하다. CTR은 우크라이나 핵 프로그램 해체에 적용되었던 방식으로 핵 프로그램의 해체 및 관련 기술자들의 재교육·사회정착을 위한 종합적 경제기술지원 프로그램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이행하기 위해서도 이러한 CTR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연합단계에서 북한 경제의 발전 지원, 북한 SOC에 대한

투자 등이 남북경제통합의 기반을 위해 필요하다. 또한 군비통제 및 군축을 위해 북한 군수산업을 민수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민족공동체에 대한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목표는 분야별 공동체의 성과를 바탕으로 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비를 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목표는 남북한 간 분야별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여 통일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민족 전체의 존엄과 자유, 삶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전략은 분야별 과제의 성과를 축적하는 것이다. 민족통합을 위해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을 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통합은 외적 통합으로 국가의 물리적 통합을 바탕으로 단일 법체제와 정치·경제·사회체제의 구축을 의미한다. 그리고 가치통합은 내적 통합으로 정치·사회·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동일한 문화기반, 동질적인 사회규범, 개인 및 집단의 공동체 의식 확보를 의미한다. 민족공동체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통합과 가치통합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⁴ 또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헬싱키프로세스”를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헬싱키프로세스”는 소련 및 동유럽의 인권개선과 시민권보장을 위해 안보, 경제, 과학, 기술 등을 종합적 패키지로 실시한 것이다. 북한의 인권개선과 시민권보장을 위해 “헬싱키프로세스”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화해협력단계에서 민족공동체의 제도통합 과제는 정치적 신뢰구축과 법·제도적 정비이며, 가치통합 과제는 인도적 지원을 실시하고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민족공동체의 과제는 남북연합단계에서 본격화될 수 있다. 남북연합단계에서 민족공동체의 제도통합 과제는 남북연합의 운영, 법제통합의 기반 마련이다. 그리고 가

⁴ 사회통합을 위한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하기 바람. 박종철 외, 『통일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4), pp. 105-115.

치통합 과제는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지원, 북한 인권문제의 해결방안 강구, 민족정체성 모색 등이다. 그리고 통일단계에서 민족공동체의 제도통합 과제는 통일을 위한 법·제도적 절차 마련, 법제통합이며, 가치통합 과제는 민족정체성 확립, 갈등관리, 사회문화통합 등이다.

<표 2> 3대공동체의 단계별 이행구도: 목표, 전략, 과제

3대공동체/ 3단계	<p>평화공동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비핵화, 새로운 평화구조 정착) ○ 전략: 그랜드 바겐, 한반도 신 평화구상 	<p>경제공동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북한 경제발전, 남북경제통합 준비 ○ 전략: 비핵·개방·3000구상 	<p>민족공동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표: 제도적 장벽 해소, 한민족 전체 삶의 질 향상 ○ 전략: 분야별 과제의 성과 축적, 제도통합과 가치통합의 병행, 헬싱키프로세스 적용
화해협력 단계	<p>비핵화, 한반도평화정착</p>	<p>비핵·개방·3000구상 이행(북한주민 생활향상, 교육·기술지원 등), 비핵화 관련 경험패키지(에너지협력, CTR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통합: 정치적 신뢰구축, 법·제도의 정비 ○ 가치통합: 인도적 지원, 인도주의문제 (이산가족, 남북자·국군포로문제) 해결 강구
남북연합 단계	<p>군비통제, 군축</p>	<p>북한경제의 발전지원, 북한SOC투자, 북한 군수산업의 민수화 전환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통합: 남북연합의 운영, 법제통합의 기반 마련 ○ 가치통합: 북한 인권문제 해결, 북한 시민사회의 형성, 민족정체성 모색
통일단계	<p>군사통합</p>	<p>경제통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통합: 통일의 법·제도적 절차 마련, 법제통합 ○ 가치통합: 민족정체성확립, 갈등관리, 사회문화통합,

IV. 맺음말

광복절 경축사에서 3대공동체 통일구상이 발표된 것은 정책목표가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민족의 장애와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서 통일이 당위적으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현가능하며, 우리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방향을 수용하면서 상황변화에 맞게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의 공동체는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이며, 공동체 간 위상은 평화공동체 및 경제공동체가 동급의 위상을 지닌 반면, 민족공동체는 상위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공동체 간 우선순위를 보면, 평화공동체가 가장 우선시되고 그다음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 순서로 중요하다. 그리고 이행순서를 보면, 3개의 공동체가 약간의 시차를 두고 추진되는 순차병행구조에 입각해 있다.

3대공동체는 각각 목표, 전략, 주요 과제를 지니고 있다. 3대공동체의 주요 과제를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단계로 구분하여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계는 상황에 따라 압축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고 지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로드맵을 마련함으로써 실제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대비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3대공동체의 이행계획 구체화와 함께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종합적 통일대비역량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에 대비한 재원확보, 인력양성, 법제도적 준비, 통일외교, 국민적 합의 등이 통일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이다.

제2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문창극 (중앙일보 대기자)

어제 박종철 소장님이 쓰신 논문을 읽어보면서 논문 쓰시느라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3대공동체 구상’이라는 것을 발표하셨는데, 이에 대해 통일연구원 학자들이 이론적, 학문적 체계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매우 고민하며 이 논문을 쓰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이 ‘3대 공동체’가 앞으로 통일을 해 나가는 데 하나의 지도 역할을 하겠지만 통일이라는 것이 지도대로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 처음에는 ‘평화공동체’, 그다음에는 ‘경제공동체’, 또 그다음에는 ‘민족공동체’라는 순서대로 통일이 진행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항상 계획했던 대로 현실이 따라가는 법은 없다. 현실은 갑자기 벌어지는 것이다.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고 하였다. 즉, 현실은 항상 먼저 가고 그 현실을 뒤따라가는 것이 바로 학문이라는 것이다. 나는 우리나라 통일도 현실에 뒤따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 논문이 가지는 의미는 비록 우리가 현실에 뒤따라갈 수밖에 없지만 학자로서 순차적으로 갈 것을 가정하고 각 단계마다 정책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정책수단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 본다는 데에 있다. 이로써 갑작스럽게 통일이 오더라도 우리가 단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하나의 지도가 완성될 것이다.

김 영 수 (서강대학교 교수)

지난 8월 15일, 대통령의 경축사 메시지 발표 이후 2주도 안 돼서 이렇게 훌륭하고 구체적인 글이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특히, 통일연구원에서 경축사의 메시지를 앞에 써 있는 대로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라고 멋지게 뽑아낸 것은 이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서 눈에 확 띄었다. 또한 박종철 박사님의 글 73쪽에 나와 있는 그림은 참으로 기막힌 아이디어의 지략이라고 보겠다.

앞의 제1회회의와 달리 지금 제2회회의의 주제는 ‘통일비전과 통일구상’이다. 결국 우리가 여기서 논의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보고 여기에 토론을 집중시켜 말씀드리고자 한다.

사실 ‘3대공동체 통일구상’이라는 것은 방안이 아니라 구상이기 때문에 일종의 ‘생각’이다. 통일로 가는 길에 대한 중요한 생각, 따라서 구체성보다는 풍부한 상상력이 더 필요하고 통일의 미래를 그리는 데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상상해보자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통일세 등과 같이 현실적인 통일로 가는 과정에 필요한 것들을 사회 각층에서 논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이 자리가 신속하게 만들어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미래를 예측하는 데에 경우의 수를 너무 많이 생각하다보면 결국 미래를 간결하게 생각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만드는 데 실패하거나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 결국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이다. 무엇을 할 것인가에 좀 더 비중을 둔 실천을 위한 상상력이 필요한 것이지, 통일로 가는 길에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박종철 박사님께서 통일로 가는 것을 등산에 비교한 것은 매우 적절하고 이해하기도 쉽다. 그리고 이번 통일구상에서 ‘평화’, ‘경제’, ‘민족’의 세 개념으로 통일로 가는 길을 설명한 것은 매우 간결하며 기억하기도 쉽고 중학교 선생님

이 시험문제로 출제하기에도 좋다고 생각하였다. ‘남북 화해·교류·협력단계’라고 했을 때 서술형으로 ‘교류’만 썼던 학생, ‘화해’만 썼던 학생들은 반점씩 주기도 어려웠는데 ‘평화’, ‘경제’, ‘민족’은 사지선다형 문제로도 아주 기막히다는 점에서 일단은 성공한 것 같다.

그리고 이번 논의가 분단관리에서 통일준비, 통일대비로 간 것은 결국 그동안의 추상성 높은 통일의 논의, 또 당위성에 함몰되어 있었던 통일의 논의, 하늘의 논의를 땅으로 끌어낸 실천성을 더 강조했다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박종철 박사님께서 예전의 민족공동체방안에서는 경제공동체를 먼저 다루고 뒤에 사회·문화통합 등을 다루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평화가 앞서나갔다는 것은 환경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핵을 갖고 있을지도 모르는 북한, 그리고 이제는 핵을 갖고 있다고 큰소리치는 북한을 대상으로 할 때 미래의 길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 평화가 앞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핵 보유 여부로써 우리의 통일로 가는 길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여기서 저는 조금 더 강력한 요청을 하고 싶다. 이러한 통일구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좀 더 분명히 하고 싶다. 앞서 유호열 교수님께서 “북한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공감한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핵 폐기, 핵 포기를 할 것인가? 그리고 진정성을 확인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천안함 사건에 사과를 하고 사건 재발방지를 약속한다는 우리 정부의 조건을 북한이 들어줄 날이 올 것인가? 단언컨대 없다. 공상적 사회주의자들, 생시몽이 “어떻게 하면 사회주의가 오느냐?”고 물었을 때 부르주아지가 “개과천선해서 돈을 좀 나눠줄 때 온다.”고 하였다. 마르크스가 이를 가리켜 ‘Utopian Socialist’라고 했는데 이번 통일구상을 자칫 낭만적으로 다루게 되면 ‘Utopian Unification’에 빠질 수 있다고 본다. 이제는 상상에 빠진 ‘Utopian Unification’은 안 된다.

노래 속에 있는 ‘우리의 소원은 통일’에 카타르시스를 느껴 눈물 흘리고, 손잡고 나서는 돌아서면 ‘북한 놈’, ‘남한 놈’ 하는 것은 안 된다. 분명히 통일구상이 이렇게 던져진 이상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라는 실천에 조금 더 힘을 써야 하며 결국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통일추진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북한의 결단을 기다리기에 앞서서 북한의 결단을 뛰어넘는 실천전략, 즉 북한에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와 개입, 관여를 해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통일추진전략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탈북자들과 함께 사는 방법도 다시 생각해야 되고, 13만 명에 달하는 조선족을 끌어안는, “대한민국에 오니까 살기는 어려워도 인간 대접은 받는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국격(國格)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우리 내부의 준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중국에 대한 허상이 깨져야 한다. 이번 천안함 사건 이후로 북·중관계의 개선을 보면서 또 유 교수님 글의 “통일 한국을 중국이 존중해 줄까?”라는 표현에 공감을 하면서 이제는 중국에 대한 연구와 생각이 좀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냉전체제에서·반북감정에서 만들어졌던 용어들을 이제 덜 쓰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흡수통일’이란 용어는 북한이 들으면 발끈한다. 흡수통일이 아닌 다른 용어는 없을까? 우리가 말하는 통일, 우리가 주도하는 통일을 의미하는 좋은 용어가 있을 것이다. 또, ‘급변사태’란 용어는 북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비상상황’이라고 하면 어떨까? ‘통일교육’이란 용어는 ‘교육’이란 단어가 붙어있으니까 학생들이 다 싫어한다. 그러나 ‘통일연수’라는 용어는 학생들이 꽤 좋아한다. ‘통일예행연습’이란 용어는 더 좋아한다. 이처럼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통일과 관련된 용어들을 좀 더 다양하게 변화시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바로 통일 구상에서 함께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끝으로 통일 상상력을 키우지 않으면 통일구상은 또 공상적

‘Utopian Unification’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통일되면 뭐가 좋은지, 즉 앞에서 논의했던 통일편익과 관련된 논의가 많이 나와야 한다. 통일되면 뭐하며 돈 벌 수 있을까?’ 자던 학생들도 다 일어난다. 즉, 통일에 대한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영화, 프로그램, 노래 등이 나와 줘야한다. 소녀시대가 “통, 통, 통, 통”하고 부르기 시작하면 다 따라 부르기 시작할 것이다. 소녀시대나 원더걸스가 서태지의 ‘발해를 꿈꾸며’와 같이 통일노래를 불러주면 참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제 통일 한국이 주변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심화된 문화외교를 통해 통일 한국의 긍정적 이미지와 위상을 이웃국가와 우리 식구들에게도 알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토론의 요지는 이렇다. 통일구상은 상상력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통일구상 하나하나의 개념을 너무 깊이 논의하는 것보다 가지를 치고 어디로 가는 것이 더 나은가 생각하며 필요한 실천적 전략을 따져서 공상에 빠지지 않는 통일논의가 됐으면 한다.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다. “결국 준비한 만큼 원하는 미래를 가질 수 있다”는 사회자 말씀처럼 대통령께서 제시하신 통일구상을 기초로 분단관리와 동시에 통일준비도 하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정서가 형성되길 기대해 본다.

한 용 섭 (국방대학교 교수)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를 읽어보니 ‘통일을 위한 협력외교’는 단 한 문단이었다. 또, 통일공동체에 대해서는 네 개의 문단을 이야기 하였다.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 한 개의 문단으로 통일연구원에서 열 페이지의 논문을 일주일 만에 완성했다는 것은 경이로운 사실이다. 그래서 “통일연구원이 참 연구를 많이 하고 있구나”하고 느꼈다. 이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논점은 두 가지이다. 동북아 협력외교를 발표하신 유호열 교수님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두 번째는 박종철 박사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다.

동북아 협력외교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천안함 사태에서 봤다시피 남북한 간에 발생한 일도 그 해결과정에는 미국과 중국이 다 관련되어 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대결하는 구도로 확대 되었다. 작은 군사적 충돌사건 하나의 파장이 이렇게 큰데, 통일이라는 대사건은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파장이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관련된 사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대통령 경축사에서 “미래의 통일된 한반도가 부여하게 될 보다 큰 기회와 이익을 공유하는 호혜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고자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사실 한반도 통일비전, 통일이 가져다 줄 기회와 이익은 더이상 우리 민족공동체만의 일이 아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천안함 문제에 북한 편을 들고 있고, 이명박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시키는 문제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중국이 북한 편을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2009년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라는 내용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발표되었다. 그때부터 중국이 긴장하면서 “앞으로 통일이 되면 한국은 무조건 미국 편이겠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통일이 안 되도록 막든지 아니면 북한을 끝까지 끌어안고 가겠다.”는 ‘2대2 구조’가 성립 된 것이다. 만약 통일이 된다면 북한을 지지한 중국은 완전한 패배자가 되고, 또 한국을 지지한 미국은 완전한 승리자가 되기에, 100:0이 되는 게임을 중국이 지지해 줄 리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한반도 통일 비전을 만들 때 통일이 되는 과정에 중국이 협조하거나 또 통일을 하게 되면 분단 상황보다 중국에게 더 큰 이익이 온다는 메시지를 주는 비전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설득해야 한다. 러시아나 일본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중국을 어떻게 설득해 나갈 것인가? 사실 독일 통일을 보면, 소련은 붕괴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서독 주도의 통일을 지지해 준 것이다. 반면에 중

국은 부상하고 있고 또 강대국으로 등장할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 그런 중국이 북한을 왜 포기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설득하려면 더 큰 기회와 이익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고 설득하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대중외교를 활성화시키고 협력하는 방법으로 ‘통일은 어느 한편이 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블루오션이므로 새로운 것을 추구해낸다’는 것을 보여 주는 비전을 만드는 작업이 중요하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동북아 협력외교를 발표하신 유호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로 박종철 박사님께서서는 그림을 창의적으로 그리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2008년 초반에 이명박 정부가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발표했을 때 거기에 공동체가 세 개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 중에 ‘경제공동체’와 ‘행복공동체’가 있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니 ‘행복공동체’는 없어지고 ‘민족공동체’가 나왔다. 여기에 논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그동안 연구를 많이 하셨으니 그 이유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질문이지만 또 하나 말씀드리면, 한반도 통일이라는 것은 한반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이해관계가 걸린 것이며, 세계사의 대변환 사건인 만큼 앞으로 이 공동체 그림을 그릴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면, ‘한반도 통일은 한민족만의 문제다’라고 해서 민족공동체를 크게 그리면 다른 나라들은 별로 관심이 없다. 특히 북한도 그렇다. 그래서 ‘민족공동체’라는 그림은 세 개의 원 중에서 제일 밑에 하나의 하부 원으로 그리고, ‘경제공동체’, ‘평화공동체’는 좀 더 큰 그림으로 그리면 어떨까 생각한다. ‘평화공동체’를 예로 들면,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반도만 평화스러운 것인가? 그렇지 않다.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 평화통일이 되면, 이 평화는 한반도만의 평화가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평화다’라는 큰 구상이 있어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를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경제공동체’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통일될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한·중·일 간에는 FTA가 체결되어 자유무역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한·미 간에도 FTA가 체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북한 지역만 제외되는 경제공동체가 형성되어 완전한 동북아 경제공동체가 불가능하게 된다. 그러면 이 경제공동체라는 것이 사실은 남북한 간을 뛰어넘는 그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민족공동체’는 안쪽에 집어넣고,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는 더 크게 만들어서 한반도만의 통일이 아니라 동북아와 세계 평화 및 경제공동체 형성에 적극적인 기여를 하는 그림을 그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토론을 마치겠다.

■ 방 형 남 (동아일보 논설위원)

개인적으로 오늘 이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라는 학술회의가 열리게 된 데 기쁘게 생각하고, 왜 이제야 이런 주제로 학술회의가 열렸는지에 대한 생각까지 해 본다. 우리가 통일논의를 할 때마다 독일의 경우와 비교를 하지만 독일은 벌써 20년 전에 통일을 이뤄 다음달, 10월 3일이면 20주년을 경축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통일의 실마리는 커녕 이제야 이런 논의를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독일을 보면서 부러운 것을 넘어서 부끄러운 생각까지 든다. 어쨌든 늦었지만 이런 논의가 시작된 것에 대해서 반갑게 생각한다.

물론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 논의의 실마리를 제공하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과연 통일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 및 이에 대한 사명 의식과 소명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반신반의하게 된다. 이유인즉, 2009년 6월에 한·미정상이 ‘한·미동맹 미래비전’이라는 것을 발표하였고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에 가서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만들어낸 문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굉장한 홍보를 하고 대대

적으로 보도되었다. 하지만 그 미래비전의 핵심인 ‘통일에 대한 한·미의 생각’은 별로 부각이 안 됐기 때문에 정부가 지금에 와서 통일 얘기를 하는 것은 일관성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해 본다. ‘미래비전’ 중에 통일 부분은 한 문장이니 읽어보도록 하겠다. “우리는 동맹을 통해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를 구축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해 나갈 것을 지향한다”고 되어 있다. 오늘 유호열 교수님께서 협력외교 말씀을 하셨지만, 협력외교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과 미국이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런데, 미래비전에 보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 대해 한·미가 확고한 원칙으로 합의를 발표했는데 정부의 어떤 정책에 무게가 실렸다면 정부가 그렇게 소홀하게 대처 했을까하는 생각을 해 본다.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한국 정부가 주도를 해서 그런 문안이 들었음에도 정부가 이를 언론에 크게 설명도 안 했고, 그러다보니 언론도 크게 주목하지 않아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래서 정부가 통일에 대해서 생각이 있었고, 또 지금 정부에서 통일을 달성하는 것은 어렵지만 상당한 토대를 마련하여 진전을 이룩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다면, 올해가 아니라 그때 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약간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기가 됐든, 이제 논의가 활발하게 되었으니 현 단계에서라도 우리가 중지(衆智)를 모으고, 통일에 대해서 정치(精緻)한 플랜을 만들어서 정부와 국민 사이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유호열 교수님과 박종철 소장님의 발제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생각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었다. 물론 통일은 남북한이 주도자가 돼야 하고, 남북한 당사국의 문제이지만 주변의 영향력이 크고 변수도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대응을 해야만 실패 요인을 점점 줄일 수 있다. 물론 정권이 바뀌면 여러 가지 정

책이 바뀔 수 있겠지만, 통일이라는 것은 정권을 초월한 민족의 장기적인 과업인데, 이것이 정권과 함께 또 바뀌어서야 되느냐는 생각을 해본다. 이명박 정부는 이제 임기 절반을 넘어섰다. 물론 2012년 대선으로 정권이 재창출될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정권이 바뀔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닌가? 당장 우리나라 내부의 변화도 변수 요인으로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2012년이 되면 미국도 대선이 있어서 오바마가 재집권을 할지, 아니면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뀔지에 따라서 많은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중국도 2012년이 되면 5세대 지도부로 바뀌기 때문에 그 때 중국의 한반도 정책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변수를 고려할 때 백년대계는 안 되더라도 수십 년 대계는 될 정도의 통일정책, 통일방안을 만들어야 하는데, 정권의 변화에 관계없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이 통일방안이 다음 정권에서도 이어져서 계속 논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가능하다면 정권을 초월해서 추진할 수 있는 통일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하나, 유호열 교수님도 발제하시는 도중에 “한반도 내부의 결정에 따라서 통일도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여기에 주변 4강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듯이 ‘여러 가지 변수’, ‘주변 4강’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엄밀히 말해서 남북통일은 한반도 당사자의 문제인데 우리가 통일 논의를 할 때 주변의 변수를 미리부터 계속 강조해야 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 않아도 주변국은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의지가 있어서 무슨 핑계만 있으면 개입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현명한 것인지 생각해 본다. 천안함 사태는 통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를 놓고 중국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우리가 가는 길을 방해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해서 필요한 대응을 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공개적으로 주변국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면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 박 소장님 발제와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통일에 대해서 정치(精緻)한 플랜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3대공동체 통일구상’도 의미가 있었고, 우리가 이것을 분석해서 더 보완한다는 것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선후관계는 있지만 우리가 ‘공동체’라는 단계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어떤 공동체 쪽으로 가더라도 문자 그대로 ‘시작이 반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통일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전진을 할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이의를 제기한다면, 박 소장님께서는 기본적으로 순차병행론에 따라 “평화공동체가 먼저 시작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상황은 평화공동체보다는 오히려 경제공동체로 가는 길이 더 가까운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은 어떻게 보면 경제공동체의 한 요소로 평가될 수 있는데,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나빠진 상황에서도 개성공단이 굴러가고 있는 것을 보면 평화공동체보다 경제공동체로 가는 길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맞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또 하나는 평화공동체의 전제라는 것이 북한의 핵 포기과 불가분한데, 이것이 과연 단기간에 가능할 것인가라는 문제이다. 장담할 수 없지만 현 단계에서는 회의적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3대공동체 구상이 당분간 착수할 기미도 보이지 않는 어려운 구상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오히려 통일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느끼게 하는 방안이 아닌가하는 의문도 드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통일세’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자기 주머니에서 돈 더 내라’고 얘기하면 다 싫어하기 때문에 통일논의가 통일세에 함몰되어 국민들이 매우 꺼려하는 논의가 되었다.

어떻게 보면 통일방안을 논의하면 부득이 또 통일비용을 얘기하고, 이는 국민들의 세금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치르지 않아도 되는 것보다는 치러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분단에 드는 비용으로는 군사비를 포함한 경제적 비용과 유엔과의 불가피한 대결외교로 인한 기회비용이 있다. 또한 분단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남북한 국민의 갈등이 깊어지고 이질화가 심화되어 여러 가지 유·무형의 분단비용이 많이 든다. 이러한 것을 전문가들이 강조를 해서 분단 상태가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를 준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유 호 열 (고려대학교 교수)

우선 한용섭 교수님께서 주신 질문인 “어떻게 중국을 설득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한반도의 통일에 대해서, 또 앞으로 우리의 활로에 대해서 갖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독일이 통일과정에서 상대했던 당시 주변국인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과 앞으로 우리가 상대해야 할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을 비교한다면, 매우 다르다. 독일은 약화되는 소련을 상대로 했지만, 우리는 육일승천하는 기세로 G-2를 형성하는 중국을 포함한 새 질서에 적응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더욱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하고 한용섭 교수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중국이 우려하는 바는 남한 주도의 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에 대해 중국 정부나 중국 전문가, 심지어 일반 국민들까지도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통일을 이루는 많은 변수 중에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으로 협조하는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통일을 이루는데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한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좋으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중국을 설득하기가 쉬울 것이다. 핵심은 우리가 한미동맹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또는 한미동맹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본다. 중국은 강화된 한미동맹을 자국의 국가이익과 관련해서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우리가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은 ‘한·미동맹체제’를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로 전환해 나가는 것이다. 2012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대북억제력을 강화하는 데에 쏟는 것과 동시에 중국과 미국을 설득해서 동아시아 다자안보 틀을 실질적인 우리 안보의 핵심구조로 바꾸어나가는 것이

향후 통일시점이 됐을 때 중국을 설득하기에 유리한 조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방형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통일외교’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주변국에 대한 외교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간에 통일방식이나 통일 그 자체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권을 넘어서 통일외교를 제대로 하는 데에도 결국은 국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권이 교체됨에 따라 얼마든지 반전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 끝장토론이라는 프로그램은 대부분 젊은 층들이 토론단을 구성하고 평가를 하는데, 전문가들이 통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과는 매우 다른 분위기라는 것을 체감하였고, 국민 합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도 느꼈다. 이것이 바로 정권을 넘어서 통일에 대한 논의와 통일준비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또 하나는 김영수 교수님도 지적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북한을 설득할 것인가’에서의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현 정권만이 아니고 북한 지도부 또는 엘리트, 그리고 일반주민까지 다양한 계층이나 집단을 의미하며,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도 역시 통일외교의 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직접 설득할 수도 있고, 중국, 몽골, 러시아, 동구권을 통하여 북한 주민들을 설득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의 통일외교라고 생각한다.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통일외교를 우리가 ‘통일외교’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감춘 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협상을 할 때도 ‘분단관리’와 ‘통일’이라는 두 가지 물건을 산다고 할 때, 통일을 사겠다고 먼저 밝히면 통일을 하기 위해서 주변국들에 지불해야 될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통일 관련 전문가 한 명을 부르더라도 우리가 통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이다. ‘C급’ 비행기 표

만 쥐도 될 사람이 ‘B급’, ‘A급’으로 쥐야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는 현실이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 우리가 분단관리에 관심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비교적 효율적으로 통일을 할 수가 있다. 우리 정부나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을 얘기하지 않아도 공감을 하면서 저렴한 비용을 들이고 효율적으로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까? 이런 공감대가 없으면 우리가 백 년 전에 치렀던 그 엄청난 비용과 부담을 앞으로 또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반면에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장점도 있다. ‘우리는 통일에 대해서 부담할 의지가 있으며, 통일을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국들의 정부나 엘리트와 국민들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이미지를 만들어 가고 구성해 나가는 것은 분단을 타파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남한주도의 통일로 가는 것이 당연한 상황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통일을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초점을 바로 이 부분에 맞춰서 우리가 지금부터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다. 중국이나 미국, 일본의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미 남한주도의 통일은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북한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인식구조를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비록 그것이 자신들의 특정 계층, 또는 특정 집단에서 생각하는 자국의 국가이익과 반할지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역사적 흐름이라고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가 통일논의를 명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된다.

‘어느 부분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인가?’, ‘어떤 시기에 어떤 과정에 서 통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략가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에 지금 전략가들이 있는가? 그것은 모른다. 그러나 정부라면 반드시 그런 전략을 구상하는 사람을 준비시켜 언젠가 때가 됐을 때 준비된 설계를 바탕으로 우리 국민들을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것이 없다면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통일을 축구경기에 비유한다면, 축구경기의 구성팀은 우리와 주변국이 아니고 ‘통일팀’과 ‘반통일팀’이라고 본다. 그리고 주변국들을 응

원단이라고 보면, 이들을 전부 다 ‘붉은악마팀’으로 만들면 통일이 이뤄지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즉, 주변국들이 우리의 응원단이 되어 우리가 통일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홈그라운드로 만드는 것, 그것이 협력외교이고 통일외교라고 생각한다.

박 중 철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한용섭 교수님께서 두 개의 질문을 해 주셨다.

첫 번째 질문은 ‘행복공동체가 왜 민족공동체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처음 현 정부가 출범했을 때 나온 ‘상생공영정책’의 내용을 보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행복공동체’가 있다. 그때는 행복공동체를 ‘분야’로 생각했던 것 같다. 즉, 거기에는 주로 인도주의 문제와 삶의 질을 향상하는 문제로 보아 주로 생활지원에 관한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들어가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분야로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그러나 민족공동체는 그것을 포괄한 좀 더 큰 분야로서 그 안에는 평화 문제 및 경제도 포함되어 있고, 행복공동체에서 언급했던 인도주의와 생활향상까지 다 포괄된 큰 개념이라고 생각한다. 즉, 처음에 행복공동체를 얘기할 때는 삶의 질 향상과 인도주의 문제가 중요하다는 하나의 정책의 범주로 제시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는 통일을 지향하는 상위의 개념으로 민족공동체가 제시되었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민족공동체를 동북아 차원으로 연결시키는 문제는 아주 적절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동안 지난 정부에서 ‘동북아공동체’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는데 그에 비해서 현실은 뒤따라가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 따라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할 때 적어도 동아시아 차원에서 평화협력 내지 경제협력을 강조할 필요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응집력이나 통합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반도 차원에서의 통일과 동북아 차원에서의 통일을 어떻게 좀 더 구체화시킬 것인가하는 것

은 남아 있는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

그 다음으로, 방형남 논설위원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 “국가 차원에서의 통일방안과 정권차원에서의 통일정책이 달라야 한다”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통일방안이나 통일정책이 다른 것 같지만 길게 보면 70년대, 80년대 이후에도 상당한 연속성을 지니고 있는 측면이 있다. 그런 점에서 통일방안으로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전 국민적인 합의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을 계승한다고 명시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다. 다만 대내적인 정책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에 맞게 우선순위를 두고, 실행정책들을 구체화하는 것에는 역시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역시 중요한 쟁점이 바로 이 ‘3대공동체’ 이행에 관한 순차병행론의 문제인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엄격한 ‘단계론’은 아니라는 점이다. 비핵·개방·3000구상을 처음 제기했을 때 이것이 단계론인지 여부에 대해 논란이 많았는데, 이것 역시 어느 정도의 선행의 환경과 여건을 얘기한 것이지 완벽한 단계는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3대공동체’도 단계론은 아닌 것 같다. 다만 그렇다고 이것이 동시병행이나 경협을 우선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첫째는 북한이 핵을 개발한 상황, 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다. 우리가 과거 10년 동안 남북 간에 교류협력이 가능했던 것, 그리고 1차, 2차 정상회담이 가능했던 것은 사실 핵 문제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1차 정상회담도 북·미 제네바 합의의 틀 위에서 가능했었고, 2차 정상회담도 6자회담에서의 합의가 중간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이것이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남북협력을 이끌어 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 현실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핵 문제 해결에 우선순위를 두고 당장 대북금융제제도 추가로 나오는 상황에서 경협 우선으로 가기에는 현실적으로 정책을 조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본질적으로 경협에 상당한 제한적인 효과는 있지만 그것이 내포하는 기능적 통합론에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반도와 같이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군사적인 대치가 극도로 심한 상황에서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될 것 같다.

연구총서

2008-01	북한체제의 안정성 평가: 시나리오 워크숍	최진욱 외	9,000원
2008-02	한반도 선진화를 위한 남북 경제관계 발전방안 모색	임강택 외	10,000원
2008-03	남북한 출입제도 [동행·통신·통관] 개선 및 정착 방안 연구	김영윤	8,000원
2008-04	전환기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변화와 대북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8-05	중국의 한-중 FTA 추진의도와 남북관계에 주는 함의	전병근, 구기보	7,500원
2008-06	한반도 통일 외교 인프라 구축 연구	박영호 외	9,000원
2008-07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	조정아 외	10,000원
2008-08	김정일 정권 등장 이후 북한의 체제유지 정책 고찰과 변화 전망	전현준 외	10,000원
2008-09	이명박정부 대북정책의 추진환경과 정책과제	박형중 외	6,500원
2008-10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전략: 이론과 실제	이금순, 김수암	9,000원
2008-11	North Korea's External Economic Relations	김규륜 편	9,000원
2009-01	북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전략적 협력에 관한 연구	전성훈	7,500원
2009-02	세계경제위기와 미-중관계 변화 연구: 북한 핵문제에 미치는 영향	황병덕, 신상진	9,000원
2009-03	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	전현준 외	10,000원
2009-04	북한경제의 시장화 실태에 관한 연구	임강택	9,000원
2009-05	21세기 한국의 동아시아국가들과 전략적 협력 강화방안	여인곤 외	10,000원
2009-06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배정호 외	10,000원
2009-07	북한 '변화'의 재평가와 대북정책 방향	박형중 외	10,000원
2009-08	북한 개방 유도 전략: 목표, 기본방향 및 단계별 과제	최진욱 외	10,000원
2009-09	북한주민 인권의식 고취를 위한 전략적 인권외교의 방향	홍우택 외	6,500원
2009-10	통일대비 북한토지제도 개편방향 연구	허문영 외	9,000원
2009-11	북한인권 침해구조 및 개선전략	이금순, 김수암	7,500원
2009-12	통일대계 탐색연구	조 민 외	8,000원
2009-13	Modernization and Opening-Up of North Korean Economy: Roles and Efforts of Neighboring Countries	김규륜 외	7,500원
2009-15	Peace-Keeping on the Korean Peninsula: The Role of Commissions	Gabriel Jonsson	20,000원
2010-01	북한 핵 보유 고수 전략의 도전과 대응	박형중 외	9,500원
2010-02	탈사회주의 경제이행 국가의 권력구조 유형과 개혁 경로: 포스트-김정일 체제에 대한 시사점	최진욱, 김진하	8,000원
2010-03	북한 개방화와 인권개선 방안연구	김국신, 김연수, 서보혁	7,000원
2010-04	북한의 체제위기와 사회갈등	조한범, 양문수, 조대엽	7,500원
2010-05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동북아전략 환경의 변화와 한국의 동북아 4국통일외교전략	배정호 외	12,500원
2010-06	북한주민의 인권의식 실태연구	이금순, 전현준	8,500원
2010-07	라진·선봉지역 물류분야 남북 협력방안 연구	김영윤, 추원서, 임을출	8,000원
2010-08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새로운 접근과 추진방안: 3대 공동체 통일구상 중심	박종철 외	11,500원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2010-09	통일한국의 정치체제	허문영	6,000원
2010-10	북한 핵에 대한 억지방향 연구	홍우택	5,000원
2010-11	북한의 포스트 김정일체제 전망	정영태 외	11,000원
2010-12	북한 주민의 의식과 정체성: 자아의 독립, 국가의 그늘, 욕망의 부상	조정아 외	17,000원
2010-13	북·중 경제관계와 남북경협에 대한 파급효과 비교분석	최수영	7,500원
2010-14	East Asian Community Building: Issue Areas and Perspectives of Regional Countries	김규륜 외	10,000원
2010-15(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	김규륜 외	13,000원
2010-15(II)	신아시아 외교와 새로운 평화의 모색(II)	김규륜 외	13,000원

학술회의총서

2008-01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비전 및 추진방향		10,000원
2008-02	The Vision for East Asia in the 21st Century and the Korean Peninsula		9,500원
2009-01	북핵 문제 해결 방향과 북한 체제의 변화 전망		6,500원
2009-02	북핵 일괄타결(Grand Bargain)방안 추진방향		5,500원
2010-01	이명박 정부 2년 대북정책 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8,000원
2010-02	독일 통일 20년과 한반도 통일비전		6,000원
2010-03	분단관리에서 통일대비로		5,500원
2010-04	독일 통일 20년과 한국의 통일대비		7,000원

협동연구총서

2008-07-01	한반도 평화번영 거버넌스의 모형개발 및 발전방안(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500원
2008-07-02	남북 교류협력 효율화를 위한 거버넌스 모형구축	양현모, 이준호	6,000원
2008-07-03	북한의 국가·사회관계와 통일정책 거버넌스	최진욱 외	7,000원
2008-07-04	남북연합 형성·운영의 거버넌스	박종철 외	8,000원
2008-08-01	국제사회의 개발지원 이론과 실제: 북한개발 지원을 위한모색 (총괄보고서)	박형중 외	10,000원
2008-08-02	국제 개발이론 현황	이금순 외	8,000원
2008-08-03	국제사회의 원조 현황 및 추진전략	임강택 외	10,000원
2008-08-04	UN기구의 지원체계와 대북 활동	최춘흠 외	6,500원
2008-08-05	양자간 개발기구의 체계와 활동	권 울 외	10,000원
2008-08-06	다자간 개발기구의 체계 및 활동	장형수 외	10,000원
2008-08-07	국제 NGO의 원조정책과 활동 연구	이중무 외	8,000원
2009-15-01	북한개발지원의 포괄적 추진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8,500원
2009-15-02	북한개발지원의 이론과 포괄적 전략	박형중 외	10,000원
2009-15-03	북한개발지원의 쟁점과 해결방안	김정수 외	10,000원
2009-15-04	북한개발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장형수 외	10,000원
2009-15-05	북한개발지원체제의 구축방안	이중무 외	9,000원
2009-15-06	지방자치단체의 북한개발지원 전략과 접근방법	양현모 외	10,000원
2009-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 연구(총괄보고서)	김국신 외	6,000원
2009-16-02	북한체제의 행위자와 상호작용	이교덕 외	8,000원

2009-16-03	북한 계획경제의 변화와 시장화	이 석 외	9,000원
2009-16-04	탈냉전 이후 국제관계와 북한의 변화	민병원 외	8,000원
2009-17-01	비핵·개방·3000 구상: 추진전략과 실행계획(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7,500원
2009-17-02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및 추진환경과 전략	박종철 외	8,000원
2009-17-03	비핵·개방·3000 구상: 한반도 비핵화 실천방안	조 민 외	9,000원
2009-17-04	비핵·개방·3000 구상: 북한의 개방화 추진방안	함택영 외	7,500원
2009-17-05	비핵·개방·3000 구상: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조명철 외	7,000원
2009-17-06	비핵·개방·3000 구상: 행복공동체 형성방안	이금순 외	7,500원
2010-14-01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원
2010-14-02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上)	황병덕 외	원
2010-14-03	북한정보체계 실태조사(下)	황병덕 외	원
2010-15-01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세부 실천방안(총괄보고서)	여인곤 외	9,000원
2010-15-02	이명박 정부 외교안보통일정책의 추진환경 및 전략과 실천방안	박영호 외	9,500원
2010-15-03	이명박 정부 대북통일정책의 세부실천방안	허문영 외	원
2010-15-04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실천방안(1): 협력 네트워크 외교 분야	남궁영 외	7,500원
2010-15-05	이명박 정부 외교정책의 세부 실천방안(2): 포괄적 실리외교 분야	전재성 외	9,500원
2010-15-06	이명박 정부 안보정책의 세부 실천방안	이수훈 외	7,500원
2010-16-01	복잡계 이론을 통한 북한의 정상국가화 방안(총괄보고서)	이교덕 외	7,000원
2010-16-02	북한의 정치부문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전현준 외	7,500원
2010-16-03	북한 시장 진화에 관한 복잡계 시뮬레이션	조정아 외	14,000원
2010-16-04	국제사회의 북한 정상국가화 지원방안	민병원 외	7,500원

논문

통일정책연구, 제17권 1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1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7권 2호 (2008)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7, No. 2 (2008)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1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Vol. 18, No. 1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8권 2호 (2009)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8, No. 2 (2009)	2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9권 1호 (2010)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9, No. 1 (2010)	20,000원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8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8</i>	이금순 외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9	이금순 외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9</i>	이금순 외	20,000원

북한인권백서 2010	박영호 외	2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0</i>	박영호 외	20,000원

기타

2008	2006 독일통일백서		8,000원
2009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Suh, Jae-Jean	5,500원
2009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8		15,000원
2009	The U.S.-ROK Alliance in the 21st Century	Bae, Jung-Ho, Abraham Denmark	10,000원
2009	북한의 주요현안과 한-미 전략적 공조	배정호	10,000원
2009	오바마 행정부의 출범에 따른 미-중관계의 변화와 한반도	배정호	10,000원
2010	김정일 현지지도 동향 1994-2009		15,000원
2010	2010 독일통일백서		13,000원
2010	21세기 러시아의 국가전략과 한-러 전략적 동반자관계		10,500원
2010	Russian National Strategy and R.O.K.-Russian Strategic Partnership in the 21st Century		13,500원
2010	NPT 체제와 핵안보		13,000원
2010	Nuclear Security 2012: Challenges of Proliferation and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15,000원

연례정세보고서

2008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8~2009	6,000원
2009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9~2010	7,000원
2010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0~2011	7,000원

통일정세분석

비매품

2008-01	2008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정영태, 김영운, 박영호, 서재진, 임순희, 허문영
2008-02	중국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차 회의 결과분석: 지도부 개편을 중심으로	전병곤
2008-03	최근 북한 권력엘리트 변동 분석	전현준
2008-04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8-05	이명박 대통령의 방일과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분석	배정호
2008-06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6차 회의 결과분석	최수영
2008-07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유엔인권이사회 보고서 평가	이금순, 김수암
2008-08	2단계 비핵화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최진욱, 박형중
2008-09	남북 이산가족문제: 평가와 향후 정책 방안	임순희
2008-10	상반기(08년 1월~6월) 북한의 대내외 정세 분석	서재진, 정영태, 전현준, 최수영, 최진욱, 임순희, 조정아
2008-11	아소 정권의 출범과 대외전략노선 및 대북전략	배정호
2008-12	한-러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2009-01	2009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박영호, 박형중

2009-02	하반기('08년 7월~12월) 북한의 정세 분석	최진욱, 임순희, 전현준, 정영태, 조정아, 최수영
2009-03	북한의 대남 비방 공세의 의도와 전망	최진욱, 전현준, 정영태
2009-04	북한의 제12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전현준
2009-05	2008년 북·중무역의 주요 특징	임강택, 박형중
2009-06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1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정영태
2009-07	한·미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국신
2010-01	2010년 북한 신년 공동사설 분석	임강택 외
2010-02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2기 제2차 회의 결과 분석	최수영
2010-03	김정일 방중과 중국의 전략외교	배정호, 박영호, 전병곤
2010-04	2010상반기 북한정세 분석 보고서	정영태, 이교덕, 최수영, 임순희, 조정아
2010-05	독일통일 20주년 조망: 독일통일이 한반도 통일에 주는 시사점	황병덕
2010-06	야로술라블 한 러 정상회담 결과 분석	여인곤
2010-07	북한 3대 세습 후계구도 분석 및 정책변화 전망	김진하

KINU정책연구시리즈

2008-01	남북 상생·공영을 위한 비핵·개방·3000 정책의 이론적 체계: 연구	서재진
2008-02	향후 5년 남북관계 주요 환경과 전개 시나리오	박형중, 허문영, 조 민, 전성훈
2008-03	북한의 기상관리 정책의 변화와 남북한 기상협력 방안연구	최은석, 황재준
2009-01	신평화구상 실현을 위한 전략과 과제	김규륜 외
2009-02(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이론적 검토와 사례연구	손기웅 외
2009-02(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을 위한 기존제안 검토	손기웅 외
2009-03	대북정책의 대국민 확산방안	조한범 외
2009-04	통일 예측 시계 구축	박영호, 김지희
2009-05	북핵일지 1955-2009	조 민, 김진하
2009-06	미국 대북방송 연구: 운용실태 및 전략을 중심으로	이원웅
2010-01	한반도 녹색성장을 위한 남북한 산림협력 법제 개선방안 예비연구	이규창
2010-02	2010년 통일예측시계	박영호 외
2010-03	북한 경제개발 계획 수립방안 연구: 베트남 사례를 중심으로	임강택
2010-04(III)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II): 정책제안	손기웅 외
2010-04(IV)	접경지역의 평화지대 조성을 통한 남북교류 활성화 방안(IV): 2010년 「코리아 접경포럼」 자료집	손기웅 외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1호	이금순, 김수암, 임순희
2008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3권 2호	이금순, 김수암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1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09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4권 2호	박영호, 이금순, 김수암, 홍우택
2010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5권 1호	김국신, 김영윤, 전현준, 이금순, 이규창

월간 북한동향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1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2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3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4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5호	북한연구실
2008	월간 북한동향 제2권 제6호	북한연구실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2009	월간 북한동향 제3권 제6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1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2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3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4호	북한연구센터
2010	월간 북한동향 제4권 제5호	북한연구센터

Studies Series

2008-01	Conceptions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Kim Soo-Arm
2008-02	Internal and External Perceptions of the North Korean Army	Jeung Young-Tai
2008-03	PSI and the Korean Position	Cheon Seong-Whun
2008-04	Transformation of the U.S.-Japan Alliance and South Korea's Security Strategy	Kim Kook-Shin, Yeo In-Kon, Kang Han-Koo
2008-05	Changes in North Korea as revealed in the Testimonies of Saetomins	Lee Kyo-Duk, Lim Soon-Hee, Cho Jeong-Ah, Lee Gee-Dong, Lee Young-Hoon
2008-06	Economic Hardship and Regime Sustainability in North Korea	Suh Jae-Jean
2009-01	The Evaluation of Regime Stability in North Korea: Scenario Workshop	Choi Jin-Wook, Kim Kook-Shin, Park Hyeong-Jung, Cheon Hyun-Joon, Cho Jeong-Ah, Cha Moon-Seok, Hyun Sung-Il
2009-02	Developing Inter-Korean Economic Relations for the 'Advancement of the Korean Peninsula'	Lim Kang-Teag, Kim Kyu-Ryoon, Jang Hyung-Soo, Cho Han-Bum, Choi Tae-Uk
2009-03	The Everyday Lives of North Koreans	Cho Jeong-Ah, Suh Jae-Jean, Lim Soon-Hee, Kim Bo-Geun, Park Young-Ja
2009-04	North Korea's Regime Maintenance Policy Since the Kim Jong-il Regime and Prospects for Change	Chon Hyun-Joon, Jeung Young-Tae, Choi Soo-Young, Lee Ki-Dong
2010-01	Strategy for Encouraging North Korean Opening: Basic Direction and Sequential Tasks	Choi Jinwook, Lee Kyo-Duk, Cho Jeong-Ah, Lee Jin-Yeong, Cha Moon-Seok
2010-02	Unification Clock: Predicting Korean Unification	Park Young Ho

■■ 통일연구원 회원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 총서, 협동연구총서, 통일정세분석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수유6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정보관리팀 도서회원 담당자(pcm@kinu.or.kr)
- 나) 전화: (02)901-2559, FAX: (02)901-2547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의 통일대비

남북통합: 경제적 시너지 효과
권구훈(골드만삭스 상무)

통일비용 및 통일편익
신창민(중앙대학교 명예교수)

제1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

제2회의 통일비전과 통일구상

동북아 협력외교: 한반도 주변정세와 과제
유호열(고려대학교 교수)

3대공동체 통일구상의 특징과 이행구도
박종철(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센터 소장)

제2회의 토론 및 질의응답